

경제정책 하면

# 나라경제

7

2011  
nara.kdi.re.kr

이달의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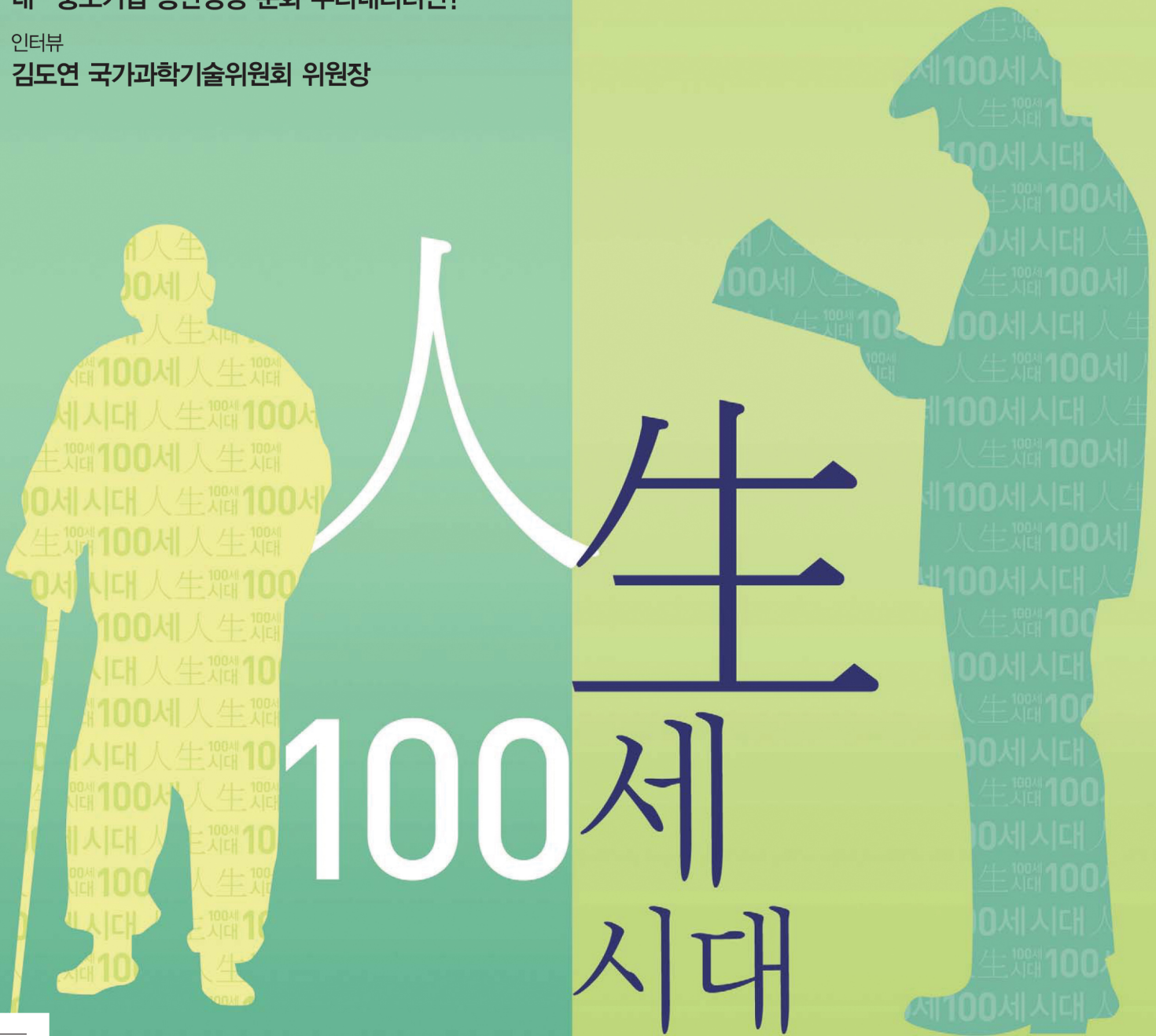
노사관계 선진화, 성과와 남은 과제는?

집중토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뿌리내리려면?

인터뷰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 불굴의 정신으로 나라를 구하다

이순신, 「난중일기」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이기에 항상 치세와 사회생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현대인들은 물질문명의 고도화로 최대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점차 인정이 메말라 가면서 정신적 빈곤을 안고 있다. 이제 현대인들은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세상에는 역사적 인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매우 많은데, 특히 나라와 정치에 관한 인물들은 늘 관심의 대상이 돼 왔다. 이순신(1545~1598년)도 그런 인물 중 하나다. 그는 대체 어떤 공을 세운 걸까. '상두(桑土)의 계책'이란 말이 있다. 즉, 장맛비가 내리기 전에 새가 뿔나무뿌리를 물어다가 집의 빈틈을 막아 대비한다는 뜻으로 편안할 때 위험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함을 비유한 성어다. 일이 일어났을 때의 사태를 대비하기도 어려운데, 허물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고 대비한다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순신은 이러한 예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전라좌수영에 있을 때(1591년) 전쟁의 조짐을 미리 알고 무기 정비와 거북선 제조에 착수하고 수군의 중요성을 조정에 보고했다. 이듬해 정월 1일에는 전쟁에 대비해 「난중일기」(亂中日記)를 쓰기 시작했다.

전쟁에 만전을 기하고자 쓰게 된 일기는 7년간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 전사하기 전까지 부득이 출전한 날은 쓰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기록했다. 왜적과의 교전 시에는 항상 적의 상황을 먼저 파악한 다음 일방 타진을 목표로 전쟁에 임했다. 이처럼 긴급한 외중에도 미리 대비해 점검하는 불굴의 정신은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일깨움을 준다.



**이순신은 항상 전쟁에 선봉장으로 나가 술선수범하는 용기를 보여줬다. 큰 공을 세우고도 오히려 자신은 조금도 한 일이 없다고 자책했다. 모친상을 당한 상황에서도 명량해전을 맞아 오직 국난 극복에 대한 한결 같은 염원으로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난중일기」를 읽다 보면 전쟁 중에도 항상 어머니에게 사자(使節)를 보내 문안을 드렸다는 내용이 있다. 이순신은 여러 해전에서 큰 전공을 세운 명장이지만, 그 이전에 아버지에게 대한 사랑을 먼저 실천한 효자였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난중일기」를 읽고 어머니를 그리워해 밤낮 지성으로 슬퍼함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다고 했다. 이순신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결국 부모에 대한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순신은 항상 전쟁에 선봉장으로 나가 술선수범하는 용기를 보여줬다. 큰 전공을 세우고도 오히려 자신은 조금도 한 일이 없다고 자책했다. 원균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 백의종군을 하는 중에 모친상을 당한 상황에서도 명량해전을 맞아 오직 국난 극복에 대한 한결 같은 염원으로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그

결과 13척으로 133척의 적을 섬멸하는 신화를 만들었다.

이순신은 4백여년 전의 인물임에도 민족의 영웅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기억되고 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을 몸소 실천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옛 성현들이 이상적으로 추구했던 도덕적 규범사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도덕적 관념보다 실용적 기능을 중시해 배금사상이 팽배하다. 하지만 역사와 함께 빛나는 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각박해진 정서에 정문일침(頂門一鍼)을 주고 있다. 나라를 구하다



**노승석**

순천향대 교양학부 교수, 이순신연구소 학술연구실장  
1969년생, 성균관대 문학박사, 성균관 한림원 교수 역임, 저·역서로는 「난중일기」, 「충무공유사」, 「난중일기(교감원역) 외 다수가 있다.



## 특집

# 인생 100세 시대 프로젝트

- 14 '100세 시대' 긴 호흡으로 준비한다**  
나석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
- 16 건강한 100세 위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한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장
- 18 일하던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하게!**  
노길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장
- 20 지역대학을 평생교육 거점센터로**  
서병재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장
- 22 금융·보험상품도 100세 시대에 맞게**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 24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적극 지원**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 26 100세 시대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 고민해야**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 28 고령자일수록 '100세 시대'에 대한 우려 높아**  
KDI 정책여론조사팀
- 30 연금보험료 인상하고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박명호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 인터뷰

- 08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 만들 것"**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 경제정책해설

- 48 2020년까지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35% 감축**  
김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미래전략과장
- 50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산·학·연·관 역량을 집중**  
송현민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장
- 52 교통사고 사망자 700명 감축 추진**  
김형석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장
- 54 사물지능통신(M2M) 장비·서비스 무료로 시험한다**  
김정렬 방송통신위원회 지능통신망팀장
- 56 무인전자세관 통해 통관행정 획기적으로 개선**  
이찬기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 특별기고

- 44 재정, 국가경제 지키는 마지막 보루**  
홍동호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 집중토론

- 38**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뿌리내리려면?  
 박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경목 덕성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전략경영연구실장

## 연중기획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 82** 착한 기업이 만드는 따뜻한 세상  
 지형철 KBS 보도본부 국제부 기자
- 84**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자발성을 강조하는 미국  
 유병선 경향신문 논설위원

## 정책 그 후

### 우측보행제도

- 78** “수저드는 오른손을 잊지 말고  
 우편으로 갈지며 앞만 볼지니”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 79** 사회적 혼란 줄이고 보행안전 높이는 ‘착한 습관’  
 김정표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사무관
- 80** “통행속도 빨라지자 시민들이 먼저 반겨”  
 강주욱 서울시철도공사 5호선 신길역장
- 81** 홍보와 더불어 보행환경도 바꿔야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

### 그들은 바쁘다

- 58**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  
 우리 생활 구석구석 ‘반짝반짝’ 빛나게!  
 김진수 생활공감정책팀장

## 세계는 지금

- 32** 교묘해진 조세회피, 빈틈없이 막을 비책은?  
 최재봉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
- 36** 중국 현대화의 필수조건 ‘서부대개발’  
 김종복 KOTRA 중국 시안KBC 관장

## 이달의 이슈

### 노사관계 선진화, 성과와 남은 과제는?

- 62** 노사관계의 과거와 현재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64** “노사관계, 일자리를 더하는 ‘블루오션’ 만들 것”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66** 정착단계로 접어든 타임오프제  
 오영민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 팀장
- 68** 노사관계 선진화의 새로운 이정표 될 ‘복수노조’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70** “아무리 어려워도 월급만큼은 제때 지급됐죠”  
 허현국 하이닉스반도체 노경팀장
- 7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경영자·노조 모두의 몫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74** 복수노조·타임오프제 도입 취지 잊지 말아야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 칼럼

- 03 천천히 읽기**  
불굴의 정신으로 나라를 구하다 - 「난중일기」  
노승석 순천향대 교양학부 교수
- 42 나라 밖 경제**  
과열 양상 보이는 브라질 경제  
이지연 KDI 경제뉴스분석팀 연구원
- 43 외신이 본 한국경제**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외신 평가 엇갈려  
조현주 KDI 경제뉴스분석팀 연구원
- 76 유정아의 소통의 기술**  
꾼  
유정아 방송인/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연구위원
- 86 나라경제 인사이트**  
복지지출 확대,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88 미래와 세상**  
공정사회로 가는 길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회장
- 89 행복한 중소기업 - (주)픽슨**  
오직 기술력으로 말한다!  
오기철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부장
- 90 It's App**  
“혹시 ‘앵그리 버드’가 설치돼 있으신가요?”  
정현수 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부 기자
- 91 세미나 -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녹색성장전략이 사회발전의 길”  
신지원 나라경제 인턴기자
- 92 수수께끼 서양미술사**  
헨리 푸슬리의 ‘악몽’  
정석범 미술사학자
- 94 그길을 걸었다 - 부산 이기대 해안산책로**  
바다 바람과 동행하며 걷는 길  
이용한 작가
- 98 시평**  
G20 서울 개발컨센서스를 계승 · 발전시키려면  
남상우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나라경제는 KDI와 14개 경제부처가 함께 만듭니다.

# 나라경제

2011. 7 [제22권 7호 통권 248호]

발행 편집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편집인	현오석 KDI 원장 박철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고일동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편집주간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정보실장
편집위원	기획재정부 신인식 정책관리담당관 교육과학기술부 이근재 기초과학정책과장 외교통상부 최철규 통상기획홍보관 행정안전부 조봉업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기획행정관리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 박상호 홍보담당관 지식경제부 서성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최중균 기획조정담당관 환경부 김영훈 정책총괄과장 고용노동부 박종필 기획재정담당관 국토해양부 윤성원 기획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조경식 기획재정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김윤수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김진홍 정책홍보팀장
편집간사	이진민 기획재정부 정책관리담당관실
편집장 취재 · 편집기자	이재열 유성임, 안선경, 권기대, 표초희, 신지원
배포	김경숙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27-8033 7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
전화	02-958-4656
팩스	02-3295-0744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e-mail	nara@kdi.re.kr
발행일	2011년 6월 30일(매월 말일 발행) 제22권 7호(통권 248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문화 라 04859호)
기사 문의	02-958-4634
광고 문의	02-958-4614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2-958-4656
구독료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제작지원 · 인쇄 사진	(주)성우애드컴 이래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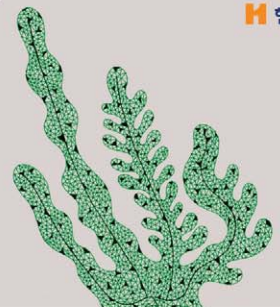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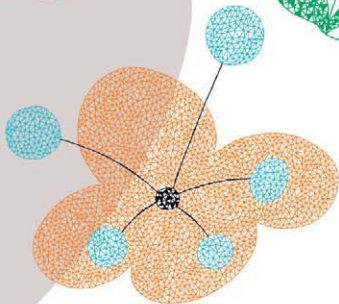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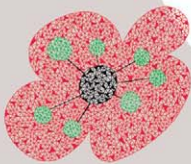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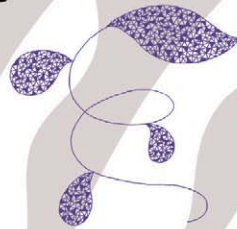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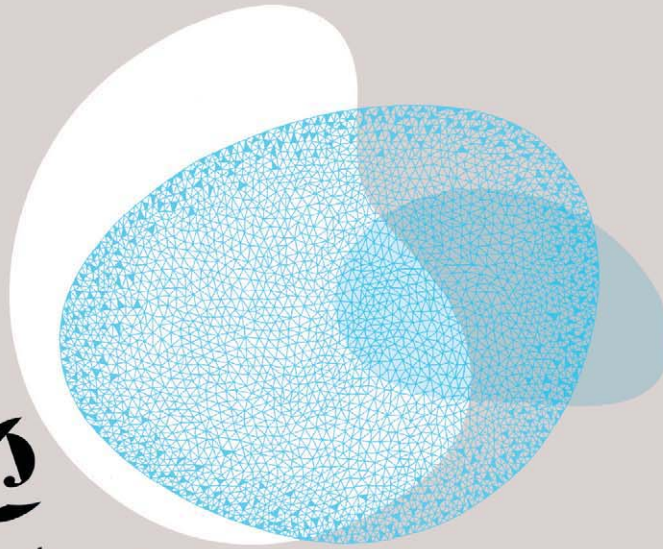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  
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주요행사

2012.5.12 - 8.12  
EXPO 2012 YEosu KOREA  
The Living Ocean and Coast



Official Partners



Official Sponsor



Official Supplier



## 93일간의 지구촌 바다축제

바다와 인류의 아름다운 공존을 노래하고  
자연과 문명의 조화로운 상생을 기원하는  
지구촌 바다축제가 대한민국 여수에서 펼쳐집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박람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 주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기간 | 2012년 5월 12일 - 8월 12일(93일간)  
장소 |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규모 | 참가국 100여 개국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1952년 서울 생  
서울대 재료공학과, 프랑스 블레즈-파스칼대 재료공학박사  
1976~1979년 프랑스 르노자동차 중앙연구소 연구원  
1979~1982년 아주대 공과대학 조교수  
1982~2008년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  
2008년 3월~2008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2009년 12월~2010년 11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2008년 9월~2011년 2월 울산대 총장  
2011년 1월~2011년 3월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2011년 3월~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 김도연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 만들 것”

지난 3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대통령 직속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공식 출범한 지 100일이 됐다. 위원장께서 취임하신 지도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의 소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과위 위원장 자리를 맡게 돼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과학기술은 국가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도 과학기술의 힘이라고 본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과학기술은 더욱 발전해야 한다.

출범 후 100여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국가 R&D 예산의 대부분을 직접 조정하기로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마치는 등 국과위가 명실상부한 국가 과학기술 플래닝 타워(Planning Tower)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방과 협력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민간전문가 채용 비율을 정부기관 중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특히 과학기술인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성과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출연연(研) 선진화 등과 같은 현안들을 잘 추진해 국과위의 기능과 위상을 빠른 시일 내에 안착화시켜 나가려 한다.

취임사에 보면 '개방과 협력'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다. '개방과 협력'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산업화 시대를 넘어 이제 정보통신 시대, 융합의 시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스마트폰이 좋은 예다. 여기에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콘텐츠가 혼합돼 있다. 이 같은 창조적 성과물들은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에서 나온다. 이러한 융합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개방과 협력'이 요구된다. 융합은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여기에는 다시 개방이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선두권에 선 과학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예전처럼 선진기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과학기술계에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앞선 위치에 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산·학·연 모든 연구주체가 개방과 협력으로 융합을 이뤄가야 한다. 국과위는 '개방과 협력'을 전제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뤄 국가의 격(格)을 높이고 국부를 창출하는 데도 기여하고자 한다.

국과위는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과위는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기획하고,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배분·조정하며, 연구개발 성과를 평가하는 종합조정기관이다. 한마디로,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전 주기를 총괄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우선 과학기술 정책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각 부처별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사업별 투자의 우선순위를 수립해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한편,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을 심의한다. 투자를 통해 창출된 성과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성과 활용과 확산을 지원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자율적·창의적 연구 활동을 후원하는 일도 맡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 2011년 현재 대한민국 과학기술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무엇보다도 기초과학 강화가 과제다. 2010년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과학 경쟁력은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 기술경쟁력은 18위, SCI 논문 게재율은 11위(2009년 기준), 특허건수는 4위(2008년 기준)로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기초원천기술보다 응용·개발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간 선진국의 기초원천기술을 응용·개발하는 '후발 추격형 기술발전 전략'을 펼쳐왔기 때문인데,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은 앞으로 30~50년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기초원천연구를 대폭 강화해야 하는 전환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은

# Interview

큰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이공계 인재의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 **진정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돼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나 대우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과학기술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임할 뿐 아니라 재능 있는 인력들이 과학기술계에 모일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국가와 사회 전반에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루며 세계무대에 당당히 서게 된 데에는 과학기술의 힘이 절대적이었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도구 정도로 인식된 탓에, 그 역할에 비해 보상과 예우가 충분치 못했던 것은 아쉬운 일이다.

앞으로 국과위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수한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도 필요하고, 노력에 따른 충분한 성과보상체계도 수립돼야 한다. 이 같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과학기술인들이 창조적인 연구성과들을 많이 창출해 낼 것이고,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존경과 우대의 분위기도 조성될 것으로 본다.

**국가 R&D 예산 배분의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은 무엇이며,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나?**

국가 R&D 예산 배분은 효율화에 기초한 질(質) 중심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매년 급성장해 올해 기준으로 14조9천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그런 만큼 이제는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등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정부투자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중복성이 확인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 조정해 그동안 언론·국회·학계 등에서 제기됐던 연구개발 유사·중복 문

제를 바로잡으려 한다.

또 성과평가 결과를 엄정하게 예산 배분에 반영해 다음년도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민간 역량이 축적된 연구개발 분야는 민간 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조적 기초원천 분야, 성장동력 창출 분야, 국민건강·안전·환경 등 현안해결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것이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지휘함에 있어서 부처 간 칸막이나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인가?**

모든 정부 부처가 국가의 미래 성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따라서 국과위가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발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한다면 국가 차원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다. 또 정부 연구개발에 여러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다(多) 부처 공동기획사업’을 추진해 정부 부처 간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소 개혁은 어떻게 추진되나?**

현재 국과위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연구회, 민간전문가로 실무추진단을 꾸려 출연연 선진화 계획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국과위가 추진하는 출연연 선진화 방향은, 출연연을 국가현안 해결을 위한 임무지향적 연구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 재량으로 연구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 방향과 총액만 결정하는 ‘뭉음 예산제도’를 도입해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 연구자에 대한 선별적 정년연장 방안에도 적극 참여해, 정년을 현행 61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또 정원과 인건비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관 평가에 있어 출연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을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연구와 산업 간 융·복합 연구 및 인력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

“

국가와 사회 전반에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룬 데는 과학기술의 힘이 절대적이었지 않나. 앞으로 국과위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는 융합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日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보듯 과학기술 관련 재난·재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비체계가 중요해 보인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역, 원자력 사고, 인수(人獸) 공통전염병 등 현안 발생 후 수습하는 국가적 시스템은 그런대로 이미 잘 갖춰져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 만큼 우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적 재난·재해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즘엔 사이버테러 문제도 심각한데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과위는 6월 초 열린 제4회 국과위 본회의에서 ‘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확정했다.

특별위는 재난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예측·예방 기술을 개발하는 등 재난관리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지원하

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실제 재난발생과 같은 비상사태 때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과제를 조속하게 추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과 힘을 합쳐 재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한다. 올해의 경우엔 고위험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 백두산 등 대형 화산활동 감시·예측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과학기술적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과위가 맡은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굳건히 뿌리내리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전 주기, 즉 기획, 예산의 배분·조정, 성과평가 기능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기능 중 하나로 이번 에 마련한 「성과평가법」 개정안은 현재 다른 부처에 부여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업무를 국과위로 이관하는 것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다. 국과위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개정·발효되는 대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 Interview



지난 3월 28일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서울 종로구 신문로 S타워 국과위 회의실에서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이 기자회견담화를 가진 뒤 김차동(왼쪽), 김화동(오른쪽) 상임위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서 언급된 출연연 선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현재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협의하고 있다.

### 위원장께서 과학기술자로서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

과학자로서의 행복과 즐거움은 '몰입'이다. 연구하는 것 자체가 즐거우며,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 앞에 몰입하는 것 자체에서 느끼는 희열이 있다. 일을 할 때나 쉬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연구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몰입의 삶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큰 성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성과 그 자체보다는 이를 얻기 위해 진력하는 과정이 행복이라고 믿고 있다.

### 과학기술자로서 위원장의 평소 철학과 좌우명이 궁금하다.

'과학기술은 미래'라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 과학기술로 인해 나라가 부강해져야 법, 문화, 스포츠, 문학과 같은 다른 분야가 다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자로서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는 '정직'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자가 자기 연구결과를 포장하거나 속여 엉터리 논문을 쓰면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과학은 합리성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과

학화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평소에 자주 하고 있다. 과학에 기초를 둔 합리적 사고를 하면 훨씬 정직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모두가 정직해지면 우리의 삶이 예측가능하고 편안해질 것이다. 학생들에게도 정직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정직하고 성실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아울러 '개방과 협력' 역시 현 시대를 살아가는 과학기술자들이 반드시 지표로 삼아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의 큰 틀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오나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 60년간 과학기술과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활약은 우리나라가 기적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다가오는 미래사회에는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심각해지는 재난·재해, 남북통일 등 여러 사회적 해결 과제들이 예정돼 있고, 이 같은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올해 초 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태 등을 보며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자들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었다. 새로운 각오로 출범한 국과위는 이러한 미래 문제들에 대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후대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국과위에 거는 기대가 크고, 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은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자라는 나무다. 과학기술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 많은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국과위가 선진적인 국가연구개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드린다. 나라경제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안선경 기자

人生

100세

시대 프로젝트

최빈사망연령(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시점)이 90세로 높아지는 '100세 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

늘어나는 수명만큼 모든 것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국가정책의 틀도 마찬가지. 국가와 개인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인생 100세 시대, 『나라경제』가 교육, 복지, 금융, 노동, 건강, 문화 등 정부 관련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 ‘100세 시대’ 긴 호흡으로 준비한다



나석권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  
skna@most.go.kr

인간 최고 수명에 대한 내기(betting)가 진행 중이다. 그 주인공은 텍사스대 바샤 노화 연구재단 오스태드 교수와 일리노이대 공공보건 대학 올산스키 교수이다. 내기는 오스태드 교수가 2000년 한 학술지에 ‘2150년까지 인간의 최고수명이 150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이에 올산스키 교수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시작됐다. 각자 150달러씩 내 이를 2150년까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그때까지 150세 인간이 출현하면 오스태드 교수 측(후손 또는 후손이 없을 경우 몸담았던 연구소)이, 그렇지 않으면 올산스키 교수 측이 이겨 주식시장에 투자한 돈(20세기처럼 주가가 상승할 경우 약 5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을 갖는 것으로 결정했다.

## 100세를 기준으로 국가 정책의 틀도 변화

누가 이길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이 점점 더 오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평균수명이 1000년대에는 24세에 불과했으나 1900년대에는 31세로, 2002년에는 66세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인간의 기대수명 증가는 단지 인생이 길어진다는 것만을 뜻하기보다는 삶의 방식이 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과 나아가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시스템도 기대수명 증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나 노년기가 40여년으로 길어진다면 현행 80세 시대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소비기간이 소득 창출기간을 초과해 국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애주기가 80세에서 100세로 변화된다면 사회 시스템도 생애주기 변화에 걸맞게 변화돼야 할 것이다.

”

현재 우리 사회 시스템은 80세 인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태어나서 20여년간 교육을 받은 후 사회로 진출해 30~40여년간 경제활동을 하고 60세 전후에 퇴직해 20여년간 은퇴·여가생활을 하는 80세 생애주기패턴이다. 이것을 전제로 교육 시스템은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근로 시스템은 청년기를 중심으로, 은퇴·여가시스템은 노년기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수명이 증가하지 않고 계속 80세 내외를 유지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소득창출기간(청년기)과 소비기간(청소년기와 노년기)이 거의 1 대 1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나 노년기가 40여년으로 길어진다면 현행 80세 시대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만약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소비기간이 소득창출기간을 초과하게 돼 그만큼 국가 부담이 커지고 결국 모든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돼 사회갈등 야기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가 80세에서 100세로 변화된다면 사회 시스템도 생애주기 변화에 걸맞게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2011년 신년연설에서 “이제 인생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이하 ‘100세 시대’)로 접어들었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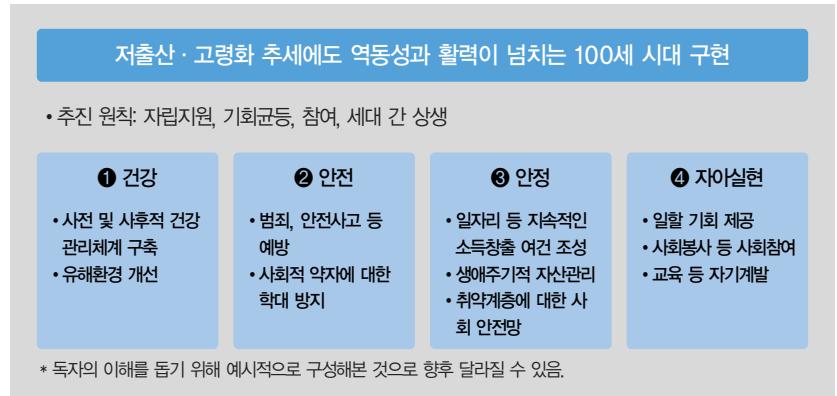
100세 시대는 인류가 처음 접하는 시대로서 어떤 모습이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또한 개인, 사회, 국가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최장수 국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100세 시대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시작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정부는 차근차근 긴 호흡으로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정책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단기간에 해답을 찾기보다는 우선적으로 100세 시대 준비와 관련된 이슈와 문제를 발굴·제기하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이다. 100세 시대에 대한 총론 연구와 함께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 분야별로도 심층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기회요인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 자립지원, 기회균등, 참여, 세대 간 상생에 주력

100세 시대의 모습은 개인이 태어나서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대, 저출산·고령화 추세에도 역동성과 활력이 넘치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100세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건강’이다.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100세 인생은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관리 시스템이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

〈그림〉 역동적인 100세 시대 구현을 위한 구상도(예시)



돼야 한다. 아울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환경도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는 ‘안전’이다. 범죄,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면 개인의 행복은 보장될 수 없으며 활기찬 사회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등에 힘써야 할 이유다.

셋째는 ‘안정’이다.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때에만 개인과 사회는 안정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역점을 뒀야 할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아닌 계층에 대해서는 생애주기적 자산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이다. 존재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며 이런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는 역동적일 수 없다. 따라서 일을 통해, 교육 및 자기개발과 자원봉사 등을 통해 개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노력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개인이 스스로 100세 인생을 준비해 자립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립지원의 원칙), 남녀노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기회균등의 원칙), 봉사·교육 등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참여의 원칙), 세대 간 상생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야(세대 간 상생의 원칙) 할 것이다. 나눔

# 건강한 100세 위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한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장  
khj02@mw.go.kr

**최** 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가히 놀라울 정도다. 2010년 65세 이상 인구는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상한 11%보다 높은 11.3%로 조사됐으며 모든 시·도가 65세 인구 비율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고령인구 비율 증가와 함께 평균수명 또한 현재 80세에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령인구 증가와 평균수명 증가 현상에 따라 ‘100세 시대’가 고령화사회를 함축하는 의미로 부각되고 있다.

물론 현재 생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세까지는 살지 않을 것이고 평균수명이 100세를 넘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보다 평균수명이 증가해 전체 생애주기에서 은퇴 후 삶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과 새로운 삶의 형태에 우리 모두가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건강관리서비스 공급자·시장 육성

현재까지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과 전망은 아직 밝지 못하다. 평균수명과 고령인구의 증가는 소득, 건강, 주택, 교육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지난 5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정원노인요양원에서 JW홀딩스 후원으로 열린 '카네이션 행복콘서트'에서 어르신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다. 당장 712만명의 거대 인구집단인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령인구가 많아질수록 노동공급은 감소하고 노동력의 질도 떨어져 미래 잠재성장률은 하락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출 등 노인 부양 부담은 증가해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결국 국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예측이 지금까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일반적 시각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100세 시대는 부정적 미래를 극복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우리 사회 비전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고령사회에도 활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와 우리 국민이 함

게 풀어야 할 과제이며 사회적 공문화 과정을 통해 제도와 우리 문화를 점진적으로 바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100세 시대의 대비는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것이나 우선 보건복지 부문인 소득, 건강, 사회참여 부문에 한정해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건강이 노후 최대 관심사로 조사됐다. 고령연구가 증가할수록 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증가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노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미래 의료비 지출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후관리적 치료에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정책 방향을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국민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급자를 육성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안이 논의 중인데 정부는 이 과정을 충분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둘째, 100세 시대는 충분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 성장주의 시대에는 공적연금의 높은 급여율로 노후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고령화 시대에는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다.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재정안정화는 2013년에 예정된 제3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료 부담이 과중한 지역가입자들의 가입 지원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도 근로기에 국민연금 외의 다양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 새로운 나눔 모형 'Korea Hands'

셋째, 길어진 은퇴 이후 기간을 활용한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회참여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와 소통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국가적으로는 은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은퇴 이후 기간을 그냥 사장시키는

“

노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미래 의료비 지출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사후관리적 치료에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정책방향을 변경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 유도를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료 부담이 과중한 지역가입자들의 지원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등으로 본인의 전문성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우리 부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의 새로운 모델인 국가자원봉사단 'Korea Hands'를 올해 발족해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Korea Hands'는 기존의 일회적인 자원봉사 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정기적인 참여를 전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나눔 모형이다. 또한 은퇴한 베이비붐세대가 시민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하도록 연계해주는 '노령지식인 사회참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 준비와 함께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미래 고령자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율을 회복시키는 정책도 중요하다. 정부는 올해 일·가정 양립을 위해 기업과 함께하는 저출산극대회를 16개 시·도별로 개최해 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고소득층 상위 30%를 제외한 보육료 전액 지원을 실시하는 등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있다.

100세 시대 대비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100세 시대 대비는 인구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 저변에 깔린 인식에서부터 연금제도와 같은 대규모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총괄부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100세 시대 도래와 베이비붐세대 은퇴 파급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이에 맞는 체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나의 경제

# 일하던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하게!



**노길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장  
kjnoh114@moel.go.kr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수사회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고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안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하고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특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고령층이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만 53세에 불과하고, 기업들의 평균 정년연령도 57세에서 10여년간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100세 시대가 도래한다면 약 30~40년간 '일 안하면서 불안정한 노후'를 맞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일정한 소득 없이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는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고 결국 보험료 부담을 늘리거

“임금피크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모범적인 사례는 발굴·확산하고 지원금 지급 시 중소기업은 우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스스로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 내 인력 고령화 추세에 맞게 인사관리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나 사회보장 수준을 하향해야 하는 사태도 우려된다. 문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직장을 찾기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종전보다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 자리에서 고용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임금피크제 확산시키고 고용연장 인센티브 제공

먼저, 기업은 경영부담을 덜고 고령 근로자는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노사 상생형 제도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가 그 단초가 될 수 있다. 노사 스스로가 협의를 거쳐 업종, 근로자 연령 구조, 직종, 생산성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기업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부는 이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년연장형, 정년퇴직 후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제도' 등으로 고용 유형을 다양화했고,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소득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앞으로도 임금피크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모범적인 사례는 발굴·확산하고 지원금 지급 시 중소기업은 우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업이 스스로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 내 인력

고령화 추세에 맞게 인사관리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업이 정년을 폐지 또는 56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7세 이후 정년으로 퇴직하는 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지원금(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업이 임금·직무체계 등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편하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직적인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선해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는 포상,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재직 단계에서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점진적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시간제 근로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고령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더 오랫동안 주된 일자리에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직업능력 개발과 재취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100세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평생 직장·직업' 개념에서 탈피해 평생 동안 수시로 '일과 교육·훈련'을 오가며 정년 없이 여러 직업을 갖는 사회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보통신 및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일'에 대한 개념과 유형도 종전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는 데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에 대비해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재취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고민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재직 근로자에게 최신 기술을 무상 교육하고 1년에 2주씩 교육 휴가 기회를 부여하는 덴마크 등 선진국들의 경험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근로자는 재직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70~80세까지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커리어 관리에 힘써야 한다. 정부는 중고령 근로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이들에게 적합한 훈련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린 '2011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들에게 특기 적성을 지도하고 학생들의 급식을 도와주며 노인 모델 활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의 기회를 갖게 된다.

전문 기술자격 취득, IT 과정 등 고객이 원하는 훈련 과정들을 보급하는 데에 집중하려 한다. 또한 노사가 공동으로 재직 중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경우엔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정년퇴직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전직을 준비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들의 회사에 대한 공헌을 감안해 원활하게 다음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자 전직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직자의 실직 기간을 단축하고 노동시장에서 구인·구직 미스매치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마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끝으로, 산업 구조 및 인력수급 변화에 기초해 실직자들에 대한 재교육 및 재훈련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과 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훈련의 양과 질을 결정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또한 생계형·봉사형 등 퇴직자의 유형별로 이들의 특성에 맞는 훈련 모델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상담을 거쳐 실직자들에게 '내일배움카드제'를 발급해 1년간 훈련비(200만원 한도), 교통비·식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원하는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중고령 실직자에게 적합한 과정을 공시하고 상담을 내실화해 다양한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활기차고 준비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일방적 대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세대 및 모든 계층이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희망하는 시기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미래경제

# 지역대학을 평생교육 거점센터로



**서병재**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장  
byung2@mest.go.kr

**최** 근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베이비 붐세대의 퇴직 및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해 40~50대(이하 '4050세대')를 대상으로 퇴직 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퇴직을 앞둔 50세 전후의 기대여명이 약 30년 이상으로 늘어나 새로운 생애주기모형에 따른 생애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중고령(예비)퇴직자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인생 전반기의 제1차 학습 이후 인생 후반기에 걸친 '제2차 학습'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책무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시대적 환

경에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4050 평생학습지원센터' 설립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에 집중하고 있어 전 생애 단계에 걸친 평생학습에 대한 공적 투자는 아직까지 매우 적고, 개인 부담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평생교육 예산을 현재 전체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의 0.03%에서 UNESCO의 권장사항인 6%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령화와 4050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국가적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에서 '제9기 청람문화강좌'가 개설돼 용인지역 어르신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다.

“

평생교육 예산을 현재 전체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의 0.03%에서 UNESCO의 권장사항인 6%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4050 평생학습통합지원센터’를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의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4050 시도평생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시·군·구에는 기존의 평생학습추진체제를 활용해 중앙과 지역의 추진체제를 완비할 계획이다.”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최대과제로 유관 부처의 정책 혼선과 중복을 피하고 학습-학력-일 등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00세 시대 평생학습 추진체제 구축과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정책실행기구로서 ‘4050 평생학습통합지원센터’를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의 시도평생교육진흥원(2011년 경기, 대전 2곳 선정, 2012년 6개 신규지정 예정)에 ‘4050 시도평생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시·군·구에는 기존의 평생학습추진체제를 활용해 중앙과 지역의 추진체제를 완비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됨으로써 대학의 학령기 입학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새로운 자원 확보 및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서비스 기능 확대란 측면에서 대학의 기능을 평생교육 거점센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 선도대학 및 중심대학 육성사업의 재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속적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대학이 중고령자의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이 중고령자를 수용할 수 있는 입시전형 추진, 성인친화적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교수학습체제 및 상담체제 구축, 지역사회로의 양성인력 배치, 일자리 창출, 재취업, 전직 알선체제 구축 등의 대학체제 개편과 더불어 지역의 교육봉사 및 사회적 기여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 ‘고령친화학습도시’ 조성 필요해

국제기구인 WHO(국제보건기구)는 2007년부터 ‘고령친

화도시’(Age-friendly Cities Initiatives)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취지 아래 평생학습을 중심으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기초 지자체가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선 ‘고령친화학습도시’(Age-friendly Learning City) 조성 사업을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사회를 준비하는 고령친화학습도시’는 고령친화적 학습시설 및 교육기관 구축, 고령친화적 학습내용 개발 제공, 고령친화적 교수-학습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상담체제 구축, 고령자 학습자 활용계획 및 실적 등을 갖춘 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100세 시대 평생학습은 항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의 추진 시스템과 시민 거버넌스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4050세대 이상의 중고령자와 고령자를 포함하는 평생학습지원조례 또는 이미 제정된 각 지자체의 평생학습조례 등에 중고령자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보완하고, 지자체장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고령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학습동아리와 학습조직을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지원·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100세 시대 평생학습 추진체제를 통해 양성된 고령인력들은 배치 및 활용체제를 통해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맞춤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수익창출형, 사회적응형, 사회봉사형으로 구분해 여전히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대상에게 수익창출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부적응자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계층에게는 사회적응형 프로그램을, 이미 고학력자로서 전문 역량을 갖춘 자에게는 자기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사회봉사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평생학습 중심의 교육체제를 강화해 100세 시대를 위기가 아닌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통해 우리 사회 100세 시대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앞서 밝힌 주요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금융·보험 상품도 100세 시대에 맞게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thkim1966@korea.kr

**평**균 기대수명이 빠르게 상승하고 1955~1963년생 베이비붐세대가 은퇴연령에 이르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는 급격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00년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2018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의 2011년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세대의 30%가 노후를 위한 저축·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응답했고, 25%는 은퇴준비를 시작하지 못했거나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혼인연령이 늦어지고 은퇴가 빨라지면서 자녀 양육·교육을 위한 자금마련도 노후 대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성 만성질환이 확대되고 요양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민영 장기병보험이 아직 출시되지 않고 있는 등 이에 대비한 보험상품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 효과적인 노후소득 보장 수단 '역모기지제도'

국민연금 등 공공 부문의 시스템이 마련돼 있으나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소득·건강 리스크의 문제를 공공 부문에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안정적이고 충분한 소득보장 기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306만명인 국민연금 수령자는 2050년 1,400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현 추세를 유지할 때 2060년대 초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금소득대체율은 42.1%로 OECD 평균(68.4%)에 비해 낮아 충분한 노후 소득원으로 기능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도 공적 장기간병보험이 2008년 도입돼 시행 중에 있으나, 수혜대상이 제한적(요양 1~3등급: 전체 노인의 5.4%)이며 재원 문제로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공적보장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한 OECD 주요 국가들은 재정 문제 가능성을 감안해 공적연금은

“

고령 소비자의 금융수요 확대에 따라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상품별 가격비교 및 보험수수료 관련 공시를 확대하고 보험광고시 위험·보험료·보험금 등을 명시해 고령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

축소하는 대신 사적연금 등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부족분을 사적연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연금개혁안을 추진 중이며, 미국·독일 등은 사적연금 가입 시 세제혜택 부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소득 보장 등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이 도입됐고 2010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29조1천억 원을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7년에는 주택을 담보로 일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역모기지(주택연금)제도가 도입돼 현재 보급 단계에 있다. 특히 역모기지제도는 베이비붐세대가 자산의 대부분(약 76%)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규제완화 통해 개인연금 시장 활성화 추진

그러나 100세 사회 대비를 위한 금융지원은 걸음마 단계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보완돼야 한다. 연금보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개인연금 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 설정의무 폐지 등으로 노령층의 연금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한 바 있으며 은퇴연령(56세)부터 노령연금 개시(65세) 이전까지 소득공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적 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하기 위한 개인 장기간병보험 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한계는 민간 부문의 개인 장기간병보험이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자 수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도 현재 10개 시중은행에서 여타 은행 등으로 확대하는 등 주택연금 서비스의 접근성도 제고해 나갈 예정



최근 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소득을 보장받는 역모기지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사진은 한 고객이 은행창구에서 역모기지론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이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펀드상품도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어린이 펀드’를 도입하고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출산연령 상승, 조기 퇴직 등으로 부모의 회사 재직 중 자녀의 학자금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학자금 마련 용도의 일정요건을 갖춘 펀드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부여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장기·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장기 적립식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령 소비자의 금융수요 확대에 따라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상품별 가격비교 및 보험수수료 관련 공시를 확대하고 보험광고 시 위험·보험료·보험금 등을 명시해 고령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완전 판매 억제를 위해 보험판매자 등의 전문교육 및 윤리·법규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생애를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후소득과 건강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이러한 문제를 재정 투입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로만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른 100세 대비 금융·보험 상품 활성화가 행복한 100세 사회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나라경제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적극 지원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hsyun@korea.kr

**한** 동안 사회 문제화됐던 우리나라의 전체 이혼건수는 최근 들어 줄고 있지만 50세 이상의 이혼 이른바 황혼이혼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0세 이상 남성 중 33만여명이 이혼해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황혼이혼 증가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족부양을 위해 가족보다 일 중심으로 생활한 베이비 붐세대 아버지와 무관하지 않다.

## 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 참여 유도

한편, 2009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 근로시간은 2,24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이다. 장시간 근로관행은 전통적 가부장제 문화와 결합해 아버지의 가족생활 참여와 여가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남성의 가족 내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퇴직 후에는 가족과 보내는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앞으로 기대수명은 약 90~100세까지 길어지고 퇴직 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기는 30~4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후의 인생을 행복하게



최근 젊은 아빠들이 육아에 관심을 갖고 직접 육아물품을 구입하거나 정보를 얻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유모차 전문매장에서 남성들이 유모차를 직접 고르고 있다.

보내기 위해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가족친화적 문화가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기업의 가족친화문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남성의 육아휴직 등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5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대표적인 기업인 유한킴벌리는 유연근무제 도입, 생애주기별 자녀 지원, 은퇴준비 프로그램 등

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보생명 은 노후생활체험, 가족사랑 인증체험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업의 생산성과 개인의 삶의 질이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족친화포럼’을 창립해 민간주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가족구성원 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해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www.family.or.kr)

에서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MBC TV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의 김정인 어린이와 방시혁 작곡가가 참여해 정시퇴근 알림송인 ‘가족송’을 제작, 관계부처·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 확대되는 아버지·남편 교육 프로그램

건강한 가족생활 및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 가정 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미리 받아 가족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가족구성원 간 관계 증진을 위한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노후를 위한 현명한 준비가 될 수 있다. 가족 내 아버지의 역할 정립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일·가정 양립, 부부관계, 자녀양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히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가족관계, 노년기생활 등 노후생활설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1월 ‘제2차 가족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부부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사, 돌봄노동은 여성의 몫인 것으로 드

〈표 1〉 50대 이상 남성의 이혼건수

(단위: 년/천건)

	2000	2005	2008	2009	2010
전체 이혼	119.5	128.0	116.5	124.0	116.9
50~54세	8.1	10.9	14.1	15.7	15.8
55세 이상	7.4	11.9	16.0	16.8	17.4

자료: 통계청, 2010년 혼인·이혼통계

〈표 2〉 2009년 국가별 근로시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OECD 평균
연간 근로시간	2,243	1,714	1,681	1,390	1,766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표 3〉 2010년 가족친화인증기업 사례

경남에너지(주)	집중근무제를 통한 정시퇴근제 독려, 재충전 휴가, 장기근속 특별휴가, 사원가족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동우하이엔(주)	임직원 가족의 심리상담실 ‘하늘샘 심리상담실’, 직장보육시설 ‘동화어린이집’, 가족참여프로그램 ‘With Family’ 등
우리FIS	법정수준 이상(최대 2년) 육아휴직제 운영, 시간제 근로·재택·원격지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주)대덕테크	정시퇴근제, 주야간 택일근무제, 주택자금 및 차량 대출 지원, 부양가족 경조사 지원 등
관세청	‘열린 아버지 학교’, ‘부모님 효 여행’ 등 근로자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가족친화적 문화가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남성의 육아휴직 등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를 더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러났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와의 대화에 있어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퇴직 이후 가정 내 아버지 소외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노후를 누구와 보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배우자와 단둘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2.7%로 조사됐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과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는 현재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 오랜 기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저축이 될 것이다. 미래경제

#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 고민해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

지난 5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는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권이혁 세계결핵제로 운동본부 총재, 전홍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선임연구원, 박상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박명호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최상목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먼 훗날의 일로 여겨지던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80세 시대’의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100세 시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100세 시대를 대비해 그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공동연구를 추진한 중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로 박상철 서울대 교수의 기조강연과 박명호 한국외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박상철 서울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현재 고령화사회로 가는 길에 건강한 노인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 고령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또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령자들이 은퇴 후 30년을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박명호 한국외대 교수는 “한국 여성의 경우 2020년 이내에 최빈사망연령(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시점)이 90세가 넘을 것이기 때문에, 100세 시대가 곧 온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세 시대 연구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한국인의 삶의 질 향상’이며, 100세 시대 도래

를 예고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노후준비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은 갈수록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며 “삶의 보람을 찾는 은퇴모델을 개발하는 등 재무적 준비와 비재무적 준비 간의 균형”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구를 계기로 “100세 시대 논의에 전 세대 및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홍택 KDI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이 세션에서는 활기차고 준비된 장수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연금·노후소득, 건강, 노동, 문화 등의 네 가지 큰 틀에서 살폈다.

먼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연구위원은 연금 문제에 대해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연금수급기간의 연장은 연금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며 “평균수명 연장 추이에 연금수급기간을 연동시켜, 연금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자동안정화장치(Built-in-stabilizer)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인력 재교육을 통한 중고령자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동생산성에 비례하는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며 근로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송양민 가천의대 보건복지대학원 교수는 “30~40년간 은퇴생활자금은 4~7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분한 은퇴생활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30대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피하며 국민연금에 가장 먼



(왼쪽) 박상철 서울대 교수가 기초강연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100세 노인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저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는 “자동차를 버리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나는 등의 비재무적 준비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발표한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현재 건강과 관련한 최고의 이슈는 만성질환인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국민건강검진체계 수준 향상”을 들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보다 많은 국민이 오랫동안 생산적으로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령차별적 정년을 폐지하고 상용형 파트타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리적 정년연장을 통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성장률 저하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주형 퓨처모자이크연구소장은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해서는 ‘노년문화’가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며 창조적 시니어 문화센터를 만들고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했다. “100세 시대 여가문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기에 정부, 시민사회, 노인

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재미있는’ 노년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인데 대부분의 베이비부머세대는 은퇴 후 자기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며 “이들을 위한 주거플랜을 만들고 리모델링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00세 시대가 재앙이 될 가능성은 바로 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그저 생존하기 위한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므로 노인들이 사회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00세 시대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0세 시대 도래에 대비해 각 분야별로 제도를 점검하고 있으며 복지, 문화, 자산관리 등에 대해 지원하고 개인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 고령자일수록 '100세 시대'에 대한 우려 높아

**장**수(長壽)에 대한 염원 덕분에 불과 30년 전만 해도 70세 전후였던 최빈사망연령이 2020년에는 90세를 넘어 이른바 100세 시대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100세 장수 시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과연 우리는 축복 받는 100세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을까?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100세 시대' 연구 중 KDI가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윤곽을 살펴본다.

## 저소득·취약계층, 100세 시대 준비 미흡해

전국의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기보다는 재앙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앙: 39.6%, 축복: 33.2%).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앙'이라는 인식이 현저히 높아졌는데, 이는 고령자일수록 100세 시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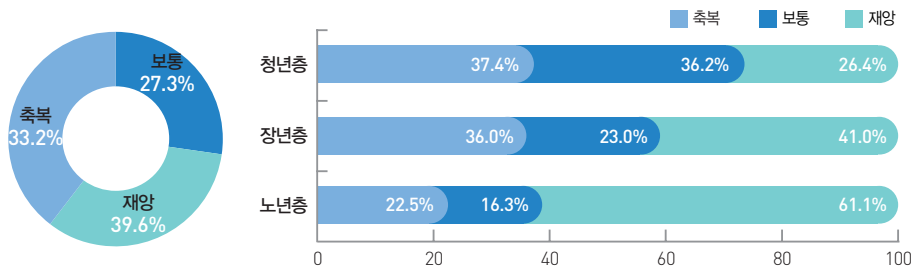
다음으로, 100세 시대 대비와 관련해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강, 소득, 일자리, 사회참여와 여가 활동 등 4개 영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4개 영역

중 100세 시대를 대비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으로는 건강(88.8%)과 노후생활비(76.9%)가 단연 높게 나타난 반면 노후일자리는 17.9%, 여유시간 활용은 13.8%에 그쳤다(복수응답).

그렇다면 각 영역에 대한 100세 시대 대비는 어떠한가? 노후생활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1%가, 노후건강에 대해서는 30.8%가, 노후여유시간 활용에 대해서는 22.1%가, 노후일자리에 대해서는 20.5%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건강과 노후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큰 만큼 다른 영역에 비해 준비를 더 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이 수치 역시 3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저소득층에서는 그 준비 정도가 더 미흡하다(노후건강: 25.3%, 노후생활비: 20.9%, 노후일자리: 17.8%, 노후여유시간 활용: 17.8%)는 점을 감안해보면, 아직 우리나라 국민,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에서는 100세 시대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개 영역 중 노후건강과 관련해 건강검진 경험 유무와 규칙적인 운동 여부를 질문했다. 3년 이내 건강검진 여부에 대해서는 69.0%의 응답자가 경험이 있다고 밝혔지만, 장년층(40~55세: 78.9%)과 노년층(56세 이상: 88.2%)에 비해 청년층(39세 이하)의 경험 비중(48.5%)은 현저히 낮았다. 규칙적인 운동 여부에 대해 55.0%가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소득수준별로 격차가 심했

(그림 1) 100세까지 장수하는 것에 대한 느낌



다(저소득층: 42.4%, 고소득층: 73.9%). 발병 후 치료보다 발병 전 예방의 중요성을 감안해보면 젊은층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저소득층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본인이 노후 책임지되 부족한 것은 국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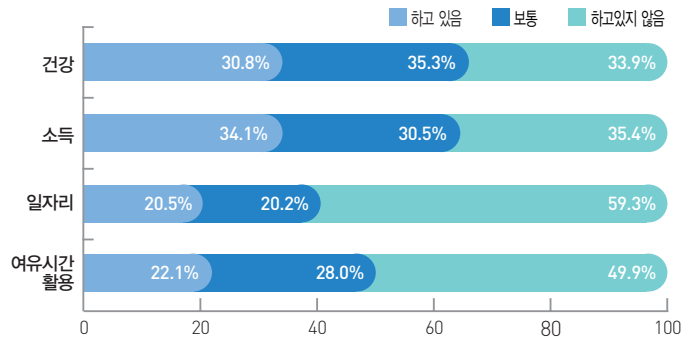
노후생활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7.7%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소득수준별로 살펴봤을 때 고소득층에서는 86.7%가 준비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26.8%에 불과해 그 차이가 현격했다. 이는 향후 노후생활비 충당 계획에 대해서도 차이를 야기했다. 비교적 노후생활비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고소득층에서는 주로 금융자산(46.7%)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려 하는 반면 저소득층에선 자녀보조(28.0%), 공적연금(26.0%)에 의지하려는 비중이 컸다.

노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지와 교육훈련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응답자의 69.7%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할 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는 ‘개인의 적성’(39.7%)과 ‘근무시간 및 복지 등의 근무조건’(23.4%)을 꼽았고, ‘보수·급여’라는 응답은 7.7%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71.7%는 노후를 위해 교육훈련 또는 평생학습을 받을 의향이 있음을 표명했는데, 특히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58.6%)과 ‘여가활동을 위한 교육훈련’(51.6%)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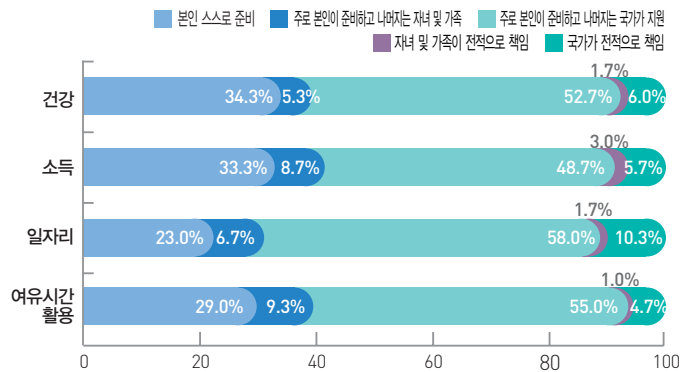
한편 앞선 질문에서 100세 시대를 대비할 때 걱정되는 정도가 가장 낮았던 여유시간 활용에 대해 응답자 대다수는 노후의 삶에서 이러한 활동이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은 응답자의 77.7%가, ‘여가문화활동’은 82.0%가 중요할 것이라 응답했다. 사회참여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만큼 응답자의 80.0%가 노후에 참여활동을 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현재 참여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가량이 동호회, 향우회, 종교단체 등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올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책임의 주체는 누가 돼야 하는 것일까? 응답자들은 모든 영역에서 책임의 주체로 ‘본

〈그림 2〉 4개 영역에 대한 100세 시대 대비 정도



〈그림 3〉 4개 영역에 대한 노후 준비 책임의 주체



인 스스로 준비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48.7~58.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본인 스스로 준비’(23.0~34.0%)가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달라도 모든 영역에서 위 두 응답 비중의 합이 80~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국가, 자녀에게 의존하려 하기보단 스스로 책임지려는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70%가량이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현재 노후 대비 정도가 미흡한 편이지만, 본인이 미래를 책임지려 하고 자문서비스 이용 의향 또한 높은 만큼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상담 및 자문서비스를 통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필적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1~17일까지 전국(제주도 제외)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진행됐으며, 노후 준비 일반사항은 공통으로 하고, 건강·소득·일자리·여가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각각 300명 단위로 조사했다.

# 연금보험료 인상하고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박명호**  
한국의대  
경제학부 교수  
mhpark@hufs.ac.kr

**인**간의 기대수명은 19세기 초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19세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2세기 동안 이룩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유아 사망률의 대폭 감소로 인한 청소년의 높은 생존율 덕분에 가능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평균 기대수명 100세 도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00세 시대는 유아사망률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평균 기대수명보다는 최빈사망연령(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시점)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100세 시대를 최빈사망연령 90세의 진입시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 100세 시대 준비없이 맞으면 '재앙'

100세 시대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준비 정도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100세 시대의 도래가 축복인지 재앙인지 물었더니 축복이라는 응답은 33.2%인 반면 재앙이라는 응답은 39.6%로 더 높게 나타났다. 100세 시대를 준비없이 맞이한다면 재앙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보다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100세 시대 연구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일생 동안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활기차고 준비된 장수사회'를 목표로 정했다. 100세 시대 연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점 목표대상을

우리 사회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장년층으로 택한 점이다. 장년층은 기존 노년층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로,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다가올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 장년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과거의 노인중심 고령화 연구보다 일반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80세 패러다임을 넘어서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의 안착을 위해서는 100세 시대에 부합하는 주요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모든 세대 및 계층은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준비한다는 취지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이 요청된다. 둘째, 연령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이 필요하다. 셋째, 과거 80세 패러다임에서는 국민, 시민사회가 요청하면 정부가 베푸는 것이 가능했지만 100세 시대에는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 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 국민,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해 스스로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참여의 원칙이 요청된다. 넷째, 취약계층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 효과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검증을 통해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이번엔 100세 시대를 대비한 주요 과제의 쟁점 및 대안을 점검해 보자. 우선 노후소득 보장에 필요한 연금제도를 살펴보면, 연금제도의 도입 역사가 오래된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연금제도 도입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부양비와 연금제도부양비(국민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가 동시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00세 시대의 도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연금수급기간이 증가해 연금재정 불안정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은퇴생활비를 추정한 결과 부부(2인 기준)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선 월 150만원, 표준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선 월 200만원,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선 월 3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구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 정부가 노인복지 예산을 크게 늘리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과거 노인부양의 한 축을 맡아오던 가족의 기능도 빠른 속도로 약해지고 있어 결국 노후준비에 대한 개인의 책임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은퇴 전에 노후자금을 많이 확보해둘 필요가 있으나 재무적 준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은퇴모델은 바람직하지 않다. 돈을 적게 쓰는 취미생활을 준비하고 평생 학습과 자원봉사 등에 참여해 삶의 보람을 찾는 은퇴모델을 개발하는 등의 재무적 준비와 비재무적 준비 간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확대해야

100세 시대를 대비해 건강수명을 높이려면 개인은 자기 책임 아래 스스로 건강관리에 힘써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높이고 건강관리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금연·절

“

100세 시대의 도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연금수급기간이 증가해 연금재정 불안정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재정안정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9월 2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3회 토트 시니어 페스티벌'에서 지역 복지관 소속 60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라틴댄스 본선 진출팀이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주·운동·영양 등의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자원을 개발 및 활용해야 하며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공사 간의 유기적 협조를 이뤄내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 둘째, 국가건강검진체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표준검진 지침안을 마련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만성질환 관리체계의 구축 차원에서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 등 통제 가능하면서 보편적인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선택의원제의 실시를 검토해야 한다.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중·고령자들의 고용기회가 절대적으로 제한돼 있다. 지난 30년간 평균수명이 15세 이상 연장됐으나 기업의 정년은 55세 전후로 그간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최근 더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5세 퇴직 이후 대부분 영세자영업이나 저임금·비정규 일자리에서 68세까지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사회를 대비해 미국·영국·일본 등은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구조의 구축을 위해 정년연장 및 활동적 고령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들 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정년제도의 개혁, 인생2모작 표준화,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생 100세 시대의 근로생애에 맞는 임금·직무체계와 고용연장을 교환하는 사회적 논의 및 합의도출 역시 시급하다. 기업별로 임금피크제도 등을 통해 고용연장-임금조정 패키지를 제공하고 개별 근로자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며 지급여력이 높은 공공 부문과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월 10일]

# 교묘해진 조세회피, 빈틈없이 막을 비책은?

##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OECD 국가들의 대응

전통적 세무조사의 한계를 감안해 여러 OECD 국가는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적발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그 조력자로 하여금 스스로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거나 기타 납세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는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최** 근 많은 국가들은 금융위기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 이하 'ATP')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공격적 조세회피란 세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전통적 대응방법이라 할 수 있는 세무조사 강화 외에도, 일반적 남용방지 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 특정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남용방지 규정(Targeted Anti-Avoidance rule), 특정 납세자 유형에 대한 소송 강화 등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ATP와 직접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가 적기에 확보되어야 한다. 관련 정보가 조기에 수집될 경우 과세관청은 공격적 조세회피 발생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납세성실도를 높일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적기에 입법 대응이 가능해진다.

세무조사가 관련 정보의 중요한 원천인 것은 분명하나 ATP 수법을 찾아내는 수단으로는 제약이 있다. 일반적으로 ATP는 복잡한 거래구조를 띠고 있다. 국가별 세법에 대한 이해도 쉽지 않고, 조사공무원의 업무량 문제도 있어 수법을 밝히기도 어렵다. 조사를 통해 ATP 수법을 확인하더라도 거래가 발생한 때로부터 조사를 통한 ATP 수법 확

인까지 수년의 시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널리 확산된 현상인지 단순히 일회성으로 사용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OECD가 지난 2월 발간한 *Tackling Aggressive Tax Planning through Improved Transparency and Disclosure*의 내용과 3월 11일과 12일 런던에서 열린 'Workshop on Disclosure Initiatives and Recent Developments in the area of Anti-Avoidance'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OECD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의무적 조기 정보보고 규정

조세를 감소시키거나 회피하는 거래구조 등에 대해 납세자 측에서 세금신고서 제출 전 또는 제출 시 과세관청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캐나다, 포르투갈, 영국, 미국, 아일랜드 등이 채택하고 있는데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 납세조력자 또는 ATP 상품의 판매자 등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은 캐나다의 사례이다.

캐나다는 지난 1989년부터 ‘Tax shelter legislation’을 통해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납세자의 자기정보 보고를 제도화했다. 이 제도는 Tax Shelter 상품(필자 주: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혜택이 거래의 순비용보다 큰 증여나 자산취득 거래)을 고안, 판매 또는 관련 조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promoter(판매자)는 관련 거래 참여자, 거래내용 등을 정해진 서식(Form T5001)에 기재해 과세관청에 ‘Tax Shelt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도록 의무



한 여성이 유럽의 소국가 안도라의 수도 안도라라베아에서 ATM기를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위치한 안도라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와 함께 OECD가 선정한 세계 3대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오명을 벗기 위해 지난 2009년 은행비밀법을 폐지했다.

화하고 있다. Promoter가 ID 번호를 받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할 경우 500캐나다달러 또는 대가의 25%를 벌과금으로 부과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엔 100캐나다달러에 하루 25캐나다달러를 가산한 금액을 벌과금으로 징수하며, 보고되지 않은 Tax Shelter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세혜택이 부인된다.

이 제도는 보고대상 거래가 제한적이고, 기업 내부에서 개발된 조세회피 거래구조(Scheme)는 대상이 아니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의 promoter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한계 때문에 새로이 ‘Reporting of Tax Avoidance Transactions’(RATR)라는 제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RATR은 특정 거래를 통해 조세혜택을 얻으려는 사람, 조세혜택을 발생시키기 위한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 특정 거래와 관련해 수수료 등을 받는 advisor 또는 promoter 등을 모두 보고의무자로 규정하되, 특정 거래 관련 보고의무자 중 한 사람이라도 보고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한 경우엔 모든 사람이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고대상 거래는 캐나다 소득세법상의 조세회피 거래로서 다음 특징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첫째, 조세혜택이 발생하는 거래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조세혜택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행됐거나 마련됐다고 볼 수 없는 거래 둘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조세혜택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조세혜택 또는 환급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거래에 참여했거나 거래의 결과에 대해 자문을 받은 납세자의 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등이 있으며 셋째, 납세자로 하여금 거래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넷째, 거래에 참여한 납세자, advisor, promoter 등이 예정했던 조세혜택이 발생하지 않은 데 대한 보상이나 면책 또는 보상 등을 받는 경우, 조세혜택 여부와 관련된 분쟁에서 발생하는 비용·수수료·이자·벌금 등을 지불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promoter가 지원할 것을 약속한 경우 등이다.

보고의무는 거래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이행되어야 하며 promoter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조세회피 상품만을 판매해야 하고 과세관청에 투자자나 참여자의 리스트(성명, 주소, 등록번호 등 기재)를 제공해야 한다. 보고의무 불이행 시엔 보고가 이뤄질 때까지 조세혜택 부여가 정지되고, 조세혜택을 받으려 했던 납세자에 대해서는 promoter나 advisor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만큼 벌과금이 부과된다. Promoter나 advisor는 납세자와 연대해

또는 각각 벌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반기로 했던 모든 수 수료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의 벌과금이 promoter에게도 부과된다.

### ▶ 추가적 보고의무 신설

일부 국가들은 납세자들의 과세관청에 대한 세금신고 시 또는 신고 전에 신고서에 기재되는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보고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특수 관계 등 관련 기업에 지급한 이자비용을 공제받으려는 납세자에 대해 그 뜻을 과세관청에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탈리아는 대규모 결혼금 발생 시 이를 과세관청에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회계기준에 따라 소득세 계산상의 불확실성을 재무제표에 준비금 등의 형식으로 반영한 경우 이를 소득세 신고 시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회계기준위원회의 유권해석(FASB Interpretation No. 48, 이하 'FIN 48')은 소득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된 불확실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FIN 48에 따라 생산되는 소득세 관련 회계정보는 조세행정에도 유용한 정보로, 미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시에 이 정보를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Schedule UTP, Form 1120)를 2010년 도입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의 소득세 신고의무, 자산규모 1억달러 이상, 회계감사를 거친 재무제표 발행, 보고대상 Tax position(조세상의 입장)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Schedule UTP를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일부 국가는 부채/자본 혼성상품, 복수국가 거주 회사, 혼성실체 등 불성실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질문서를 제시해 조사대상 선정 또는 실제 조사 시 활용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외국 소유 뉴질랜드 법인의 그룹 내 자금거래와 관련된 ATP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관계회사 등과의 자금거래에 대한 의무적 질문서를 개발했다. 다음은 그 상세 내용이다.

뉴질랜드 국세청의 질문서는 외국 소재 관계회사로부터 선택적 전환사채(Optional Convertible Notes), 의무적 전환사채(Mandatory Convertible Notes), 기타 혼성 상품(이익 연동 회사채, 전환사채, 우선주 등) 등 부채/자본 혼성상품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 그 액면가, 발행일 및 기타 조건 등을 보고하도록 한다. 또한 관계회사 중 복수의 국가에서 거주자로 인정되는 이중 거주자(Dual Tax Resident)나 한 국가에서 납세의무자로 인정되나 다른 국가에서는 재무적으로 투명한 혼성실체(Hybrid Entity) 형태의 회사가 있는 경우 그 상세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관련 조항에 따라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계산한 총부채와 총자본에 대한 상세한 내역도 답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답변은 의무적이며, 미제출 시 불성실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 ▶ 유권해석

세법에 대한 '사전 해석 제도'(Advance Ruling Mechanism)는 납세자의 자기정보 보고가 본래의 목적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ATP 관련 정보가 과세관청에 보고되는 효과가 있으며, 해석 결과의 효력 범위에 따라서 ATP 대응에도 유용하다. 세법 해석 제도는 국가별로 다양한 체계가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해석을 요청한 납세자에 대해 효과가 발생하는 세법의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은 'Product Ruling' 제도를 해석을 요청한 납세자에게만 적용하지 않고, 특정 상품에 투자하는 납세자 전반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했다. 이하에서는 호주의 'Product Ruling' 제도를 소개한다.

1990년대 호주는 조세혜택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투자상품 등이 다수 판매됐다. 과세관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 상품이 확산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Product Ruling 제도가 도입됐다. 'Product Ruling'은 특정 'product' 거래를 통해 청구되는 조세혜택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으로서, 특정 'product'를 거래하거나 잠재적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적용된다. 여기서 'product'란 동일하게

나 매우 유사한 계약 또는 거래로서, 다수의 사람이 수수료 등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 또는 참여하는 투자상품 (Investment scheme, Tax effective investment, Financial scheme, Insurance scheme 등)을 뜻한다. 'Product Ruling'은 ruling에서 기술하고 있는 유형의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ruling 발표일 이후에 개시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ruling에 적시된 거래형태와 동일한 거래는 과세관청을 기속하나 거래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호주에서 Product Ruling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관련 거래구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신청 시 사실관계와 실제 product의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기존 ruling과 다른 세법적용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엔 과세관청이 발표된 Product ruling 철회, 청구된 공제혜택의 부인, 상품 promoter에 대한 처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 협조적 성실납세 프로그램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위한 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조세관련 위험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 과세관청에는 전반적 납세성실도를 개선해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협조적 성실납세 프로그램은 기업으로 하여금 모든 주요 거래나 과세상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과세관청에 수시 제공하도록 하되, 과세관청은 이에 대한 해석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세관청은 잠재적·공격적 조세회피관련 정보를 조기에 입수할 수 있으며, 납세자와의 협조를 통해 부당한 조세회피행위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미국의 Compliance Assurance Process, 영국의 Tax Compliance Risk Management Process, 호주의 Annual Compliance Arrangement, 아일랜드의 Co-operative Approach to Tax Compliance, 이탈리아의 Risk Management Monitoring, 네덜란드의 Horizontal Monitoring, 뉴질랜드의 Co-operative Compliance Initiative, 스페인의 Forum for Large Taxpayers 등이 포함되며, 이들 제도는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 벌칙과 연계한 자기정보 공개 유도

일부 국가는 ATP 관련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가산세나 가산금 면제 또는 감경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납세자가 조세회피 거래를 한 경우 20%의 가산세와 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나, 거래일로부터 90일 내에 과세관청에 거래내역을 통보하는 'Protective Notification'을 이행한 경우 가산세 및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공격적 조세회피(abusive tax position)에 대해 과소납부세액의 100%를 가산세로 부과하나, 일정 기간 내에 과소납부세액의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경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조사 통지를 수령하기 전까지 보고하면 가산세가 75% 감경되며, 세무조사 통지 후 세무조사 착수 전까지 보고하면 가산세 40%가 감경된다.

OECD 국가들이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자기정보 보고 제도 중 상당부분은 우리나라도 시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추가적인 보고의무 제도로 볼 수 있는 '해외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해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 은행 또는 증권 계좌에 대한 신고의무를 신설했으며, 2009년 말부터 시범 시행해오던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2011년부터 70개 중견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이 공격적 조세회피와 관련된 정보를 적기에 입수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감안할 때, 아직도 보완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의무적 조기 정보 보고 제도 도입, 대기업을 위한 수평적 성실납세제 확대 시행, Product Ruling 제도 도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내외경제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주OECD대표부 및 외교통상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재봉**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  
jb0202@daum.net

# 중국 현대화의 필수조건 ‘서부대개발’

번영, 안정, 단결의 서부지역 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장기 국가 프로젝트 서부대개발은 지난 10년간 충칭, 청두, 시안을 중심으로 1단계 기초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올해부터 향후 20년간 2단계인 발전단계에 돌입했다. 발전단계에는 자원개발에 역점을 둔 새로운 경제성장벨트가 계획 추진될 전망이다.

**중**국의 서부대개발은 현재 진행형이다. 워낙 장기 계획이어서 이젠 다소 진부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1999년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시안강화(西安講話)에서 비롯된 서부대개발은 꾸준히 진행돼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간 남수북조(南水北調), 서기동수(西氣東輸), 서전동송(西電東送), 칭짱철도(青藏鐵道)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돼 왔다.

## 2050년까지 진행되는 3단계 프로젝트

중국 ‘12.5 계획’(편집자 주; 새로운 경제, 사회 운용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의 준말, 해당 내용은 지난해 ‘세계는 지금’을 참조)에는 서부대개발을 심화시키고 특수 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데 관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 철도, 도로, 공항, 수운 등 지속적인 교통망 확충, 중점 수리공정 건설, 가스석유관 및 전력망 확충 등 기초 인프라 확대, 생태환경보호, 자원개발 등이 골자다. 특별히 충칭, 청두, 시안 등 중심도시 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축을 배양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서부대개발은 2050년까지 번영, 안정, 단결의 서부지역 건설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국가 프로젝트로서 3단계

로 추진되고 있다. 인프라 확충 및 중점지역 개발에 역점을 둔 기초단계(2000~2010년, 10년간), 개발능력을 제고하고 투자규모를 확대하는 발전단계(2010~2030년, 20년간) 그리고 서부지역의 전면적인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현대화단계(2030~2050년, 20년간)가 그것이다.

지난 10년간 충칭, 청두, 시안을 중심으로 하는 중점지역 개발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 청위 경제구(청두, 충칭), 관중 텐슈이 경제구(시안), 광시북부만 경제구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됐다. 이들 지역은 중국 서북부, 서남부, 남부 연해지역에 위치하면서 서부대개발의 대외개방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청위 경제구는 편리한 장강수운으로 화동지역과 연결되고, 관중 텐슈이 경제구의 중심도시 시안은 중앙아시아를 잇는 신실크로드의 중심에 서 있다. 북부만은 중국 남해안의 우수한 항만을 이용해 동남아시아와 교류를 촉진한다. 이들 3대 경제성장축은 2020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단계에 접어든 올해부터는 자원개발에 역점을 둔 새로운 경제성장벨트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지역에는 중국의 석유 32%, 천연가스 83%, 석탄의 50%가 매장돼 있으며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도 풍부하

다. 자원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화석연료 고갈을 대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적극 개발하며, 사막화 방지를 위해 산림녹화를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신경제성장벨트, 자원·인프라 바탕으로 급성장 예상돼

신경제성장벨트는 중국발전개혁위원회 서부개발사에서 기초조사를 끝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이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4개 신경제성장벨트는 모두 서북부에 위치해 있다. 후바오인(呼包銀), 신장 텐산(天山北坡), 란시거(蘭西格), 산간닝(陝甘寧) 경제구다.

후바오인 경제구는 내몽고 후허하오터, 바오터우 2개 도시와 닝샤 인촨을 잇는 경제벨트로서 내몽고 오르도스, 산시 위린 북부, 닝샤 닝둥으로 이뤄진 에너지 금삼각 지대가 핵심으로 풍부한 석탄 자원이 매장돼 있다. 이 지역의 석탄 자원은 철도를 통해 베이징으로 수송돼 환발해만경제권에 풍부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신장 텐산 경제구는 텐산산맥과 준가르 분지 사이의 유라시아횡단철도가 지나는 구역에 형성된 공업지역으로 우루무치를 비롯해 중앙아시아와 접하고 있는 변경도시 아라산코우 등이 핵심이다. 이 지역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관이 지나는 요지로서 에너지 전략기지도 하다.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연간 2천만톤의 원유를 중국으로 수송할 중국-카자흐스탄 파이프라인 2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란시거 경제구는 간수성 란저우, 닝샤 시닝, 거얼무를 잇는 경제벨트다. 칭짱고원 북부 차이다무 분지를 칭짱철도가 관통하는 지역으로서 염호, 석유천연가스, 흑색금속, 유색금속, 석탄 등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수력,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 중국 국무원의 낙후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2010년 칭하이성 차이다무순환경제시험구 총체규획을 비준했다.

산간닝은 산시성, 간수성, 닝샤 회족자치구가 서로 감싸안은 분지형태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하다. 옌안 지역은 또한 혁명근거지로서 올해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년을 맞아 우선 발전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다.

4개 신경제성장벨트는 그동안 구축한 철도, 도로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자원 개발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들 자원은 직접 베이징, 상하이 등 연해지역으로 수송되기도 하지만 자체로 화학공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서부내륙 중심도시인 시안 등으로 옮겨져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향후 서부지역에는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기지, 자원삼가공기지, 장비제조업기지, 신홍전략산업기지가 형성될 것이다.

현재 충칭, 청두, 시안 세 중심도시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해 서부삼각경제권 형성에 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주강삼각주, 장강, 환발해만에 이은 중국 제4의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지역은 서부지역 50여개 도시를 아우르며 서부지역 전체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인근 지역으로의 파급력이 막강하다. 서삼각지역은 1950년대 내륙개발 및 1960~1970년대 삼선(三線) 건설의 중요한 지역으로서 독립된 공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 최대의 국방과학기술공업기지도 하다. 그동안 축적된 국방과학기술의 산업응용으로 발전잠재력도 매우 크다.

서부대개발은 주요 교통간선을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중심도시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점, 선, 면 방식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경제성장축을 세우고 서부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경제성장벨트를 건설하며 그 외 성급 성장점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다층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서부대개발의 모호한 개념이 차츰 구체화되면서 내륙 깊숙한 지역이 점점 현대화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동부 연해지역만 볼 게 아니라 서부내륙으로 관심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더 큰 중국이 다가오고 있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KOTRA 및 KDI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복**  
KOTRA 중국 시안KBC 관장  
goldjb@kotra.or.kr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전략경영연구실장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협력시스템이 기업 경쟁력 좌우해… 동반성장 생태계로 경제구조 바뀌나가야”

**곽수근:** 오늘 토론에선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먼저 동반성장이 대두된 배경은 무엇인가?

**김승일:** ‘동반성장’은 참여정부 때의 ‘상생협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익률이나 성장에 있어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숫자가 제한적이다 보니 성장잠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고용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것이 2004년 ‘상생협력’이 시작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상생협력’은 MB정부 초기 ‘기업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됐으며, 그후 양극화 문제 등 여러 정치적 이슈와 연관되면서 지난해 여름부터 ‘동반성장’으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김경목:** 상생협력 추진배경에 대해 좀 더 덧붙이자면 첫째, 참여 정부는 세 가지 양극화 문제, 즉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지역 간 양극화, 계층 간 양극화 등에 관심을 가졌는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들고 나온 것이 상생협력이다. 둘째, 산업구조 측면이다. 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 완성품 중심으로 급속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소재가 취약하면 산업구조 측면에서 뿌리 없는 나무가 될 수 있기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생협력’이 중요하게 생각됐다. 셋째, 국제 경쟁구조의 변화다. 과거 개별기업 간 경쟁에서 이제는 기업들 간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경쟁구조에선 동반성장체제, 상생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정부의 동반성장정책도 이들 배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

때\_ 2011년 6월 16일 오후 2시  
 곳\_ KDI 세미나실  
 진행자\_ 광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참석자\_ 김경묵 덕성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전략경영연구실장



**광수근:** 경영패러다임이 주주가치경영에서 장기적 주주가치를 위한 공유가치경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보여진다. 과거에는 종업원들이 비용으로 인식됐으나 이제는 협력파트너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협력업체도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동반성장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번엔 MB정부 동반성장정책의 핵심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김승일:** 참여정부에서는 상생협력을 정부가 주도했는데, MB정부는 민간 동반성장위를 만들어 민간 주도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와는 달라진 아주 독특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김경묵:** 정부가 지난해 12월 동반성장위를 출범시킨 배경에는 민간 차원에서 ‘공정한 사회, 함께 성장하는 사회’ 이런 것들을 사회운동으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정부가 시장질서를 교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은연중에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동반성장지수, 초과이익 공유제.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다 뜨거운 감자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직접 주도하기엔 부담스러우니까 동반성장위에 맡긴 게 아닐까.

**광수근:** 두 분의 말씀처럼 동반성장위의 출범은 그 자체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는 어느 정도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김승일:**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동반성장위가 정부의 역할을 맡는다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기업은 시장의 경쟁질서 위에서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리고 기업이 활동하는 생태계나 기본구조를 고민하는 것은 정부나 정치 쪽에서 해야 할 일이다. 동반성장의 관행과 문화가 뿌리내리려면 무엇보다 동반성장이 가능한 기업 생태계가 마련돼야 하는데 그것이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김경묵:** 동반성장위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가 동반성장위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동반성장위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이다. 가령 OECD 국가들의 기본적인 중소기업정책을 보면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경쟁제한 요인을 없애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동반성장지수도 포함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납품단가 조정 체계 구축,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을 보면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동반성장위의 정책이 소비자 후생을 장기적으로 훼손할 위험도 있어 보인다.

**광수근:** 정부가 해야 될 일과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는 사적계약의 영역이어서 그것을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반적인 시대 흐름도 규정 중심(rule base)에서 원칙 중심(principle base)으로 가고 있다. 환경이 워낙 급하게 바뀌고 있어 모든 것을 다 규정으로 만들어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 쓰나미 사태 때 나타난 것처럼 규정이 없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회가 되어서 안 된다. 중요한 원칙만 정해지면 그 안에서 다양하게 움직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

**김경묵:** 규정보다 원칙을 정해 오래갈 수 있는 성장기반을 조성하지는 방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동반성장위가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을 들고 나오니까 당장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두려운 눈으로 보고 있다. 동반성장



박수근 교수

“떡을 키우려면 협력해야 하고, 떡을 나누려면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떡을 더 가져가는 데만 관심이 있다. 5년, 10년 뒤를 내다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기업과 사회에 유익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위, 정부 모두 이 부분을 고려했으면 한다.

**김승일:**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비율이 몇 년 전 80%에서 최근 5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어떤 법의 준수율이 50%가 안 된다는 얘기는 법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의미다. 하도급법 자체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대주주들이 법을 어겨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더라도 바로 사면돼 나오는데, 보통의 중소기업은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동반성장이나 상생이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불공정한 구조와 법의 적용에서도 대기업이 우대받는 현실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사회경제구조의 공정성, 법 집행의 형평성 기반 위에서 동반성장위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시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김경목:** 저 또한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은 아주 잘 짜져 있다. 자금지원 같은 부분은 OECD 어느 국가보다 양이나 비율 측면에서 풍성하다. 분배를 강조하는 북유럽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훨씬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대기업들이 곤란한 영수증 처리, 로비자금 등 소위 공정하지 않은 것들을 중소기업에 떠안기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의 불만이 커지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박수근:** 두 분 모두 옳은 지적이다. 법 준수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반성장이나 상생은 존재할 수 없다. 법을 어기면 기업의 생존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기업이 법을 위반했을 때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사회적인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위반사실을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 그것만 잘 지켜져도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로 주제가 넘어간 것 같다. 정부가 지난 7~8년 동안 많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아직도 뚜렷한 성과나 변화가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김승일:** 무엇보다 동반성장 인프라나 생태계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런 상태에서 동반성장을 추진하다 보니 선택한 정책수단(tool)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경쟁력이 없는 부문도 계열사를 설립해 그쪽에서 경영권 승계자금을 만들고 있다. 이를 직접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적합업종 같은 것을 통해 하려니까 힘이 드는 것이다. 어려워도 국회에서 본질적인 것을 건드려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상생이나 동반성장을 하려면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본질적인 부분은 한번도 짚어보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이라도 경영학회, 경제학회, 국회, 정부, 대·중소기업 전문가들이 모여 제대로 한번 논의해야 한다.

**김경목:** 우선 우리 사회에 팽배한 대기업 우월주의가 문제다. 오



김경목 교수

“우리 사회에 팽배한 대기업 우월주의가 문제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우대하고 중시하는 정책을 펴왔다. 사회적으로도 가령 대기업에 우선 취직하려고 하는 것 등이 다 대기업 우월주의와 연관이 있다.”



김승일 회장

“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경쟁력 없는 부문도 계열사를 설립해 그쪽에서 경영권 승계자금을 만들고 있다. 이를 직접 제어하지 못하고 적합업종 같은 것을 통해 하려 하니 힘에 드는 거다. 어려워도 국회에서 본질적인 것을 건드려야 한다. ”

랫동안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우대하고 중시하는 정책을 펴왔다. 가령 우리가 대기업에 우선 취직하려고 노력하는 것 등이 다 대기업 우월주의와 연관이 있다. 둘째, 법은 잘 정비돼 있고 중소기업에 지원도 많이 하는데 감시와 과정에 대한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거래질서가 문란하고 공정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끝으로, 중소기업에도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 중에는 단순히 혜택만 받고 노력을 안 하는 곳이 많다. 기업가 정신이 취약한 곳들도 적지 않다.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곽수근:** 현대경제의 근간이 경쟁이고 협력인데, 떡을 키우려면 협력해야 하고 떡을 나누려면 경쟁해야 한다. 경쟁해서 떡 가져가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면 파이를 키울 수 없듯이 이 둘은 항상 밸런스를 찾아야 한다. 이제는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 간의 경쟁이 되고 있다. 얼마만큼 협력시스템을 잘 구축하는나가 바로 그 기업의 경쟁력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의 의식은 아직도 기업 간 경쟁에 머물러 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마찬가지다. 단기적으로 떡을 더 가져가는 데만 관심이 있지 떡의 총량을 더 키우는 데는 관심이 적다. 동반성장정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시야가 아직도 좁기 때문이다. 5년, 10년 뒤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기업과 사회를 위해 좋은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김승일:** 전적으로 동감한다. 며칠 전 대기업의 임원 KPI(핵심성과 지표)를 볼 일이 있었는데, 비전과 중장기 전략 부분에는 2020년 매출 몇 조원의 세계적 기업이 목표라고 써놨지만 실제 내용은 100% 단기 지표였다. 매년 단기이익을 올리는 데 급급하면서 비전은 그럴 듯하게 만들어 놓았더라. 아마 대기업 중 상당수가 그와 같은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거다. 동반성장의 문제도 일부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할 때 그런 부분도 지표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곽수근:** 김 박사 말씀은 얼마 전 대통령이 언급한 대기업의 ‘총

수문화’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다.

**김경목:** 문화를 말씀하셔서 애긴데, 저는 제도의 문화적 적합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호프스테드(G. Hofstede)의 국가 가치관에 대한 비교연구는 1967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데, 2005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미국보다 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로 나타났다. 우리의 문화적 체계가 상당히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과거를 생각하면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단주의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제도를 강요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럴 경우 제도가 걸돌 수밖에 없다.

**김승일:** 동반성장을 하려면 일반국민들도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한 부품협력업체에 갔을 때 들은 얘기다. 좋은 대학 나온 한 신입사원이 2년 동안 근무실적도 뛰어나 핵심인재로 키워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표를 내겠다고 하더라. 이유를 물어 보니, 장차 차가가 될 쪽에서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마땅치 않아 했다는 것이다. 이게 현실이다.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는 큰 것을 존중하고 작은 것을 무시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간 동반성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곽수근:** 동반성장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동반성장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일이라면 좀 더 시간을 들여 많은 연습도 하고 현장 목소리도 많이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 바탕 위에서 구체화된 동반성장정책을 만들어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나라경제

'나라 밖 경제'는 해외 주요 경제저널의 유익하고 흥미있는 기사를 소개하는 난입니다.

## 과열 양상 보이는 브라질 경제

'Too hot,' Economist, June 6th, 2011

브라질은 지난 10년간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성공했다.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동한 인구가 급증하면서 신용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소득불평등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개선됐다. 브라질 국민 대다수에게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좋았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브라질 경제가 이처럼 안정된 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대외 호재가 있기도 했지만 정부가 적절한 경제정책을 펼친 공이 크다. 한때 거시경제 정책 시행에 있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브라질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와 최근의 외자유입 급증 사태를 잘 극복하면서 예상외의 경제 안정세를 유지해냈다. 브라질의 경제 관료들은 이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브라질이 세계로부터 배울 것보다 세계가 브라질로부터 배울 게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결코 안주할 때가 아니다. 우선 브라질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은 현재 6.5%로 이미 높은 상황에서 계속 확대될 조짐이다. 노동시장 수급 여건이 빠듯한 가운데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와 고물가가 고착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하려면 거시경제 정책을 긴축하는 게 최선이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오고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비해 완화된 상태다. 브라질 당국자들은 금리인상의 속도를 높이면 해외자본이 더욱 빠르게 유입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외자유입 억제에 위한 자본통제에 집중하느라 긴축통화라는 보다 강력한 정책도구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GDP의 3%에 육박하는 기초재정수지를 자랑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수요를 둔화시키고 실질금리를 낮추려면 지금보다 훨씬 과감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경제가 고성장 중인 상황에서는 다음 경기침



브라질 상파울루 고급 쇼핑몰 이지엔노폴리스. 브라질 경제가 살아나면서 명품 핸드백과 고급 와인 등 고가 소비재의 수요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체 시기가 도래했을 때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수지를 흑자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현재 재정수지 흑자가 정부 투자 둔화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요인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투자를 줄이기보다 이전지출을 줄여야 한다. 재정흑자가 지속될지도 의문이다. 브라질의 실질 최저임금은 내년에 7.5% 오를 전망인데, 연금지출이 최저임금과 연계돼 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 정부는 장기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긴축조치가 단기 경제불안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어막이라면 정부 개혁은 브라질의 장기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길이다. 개혁을 통해 정부 조직이 간소화되면 생산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저축률과 투자율도 상승할 것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연금개혁도 시급하다. 이러한 개혁은 실행하기 어려운 만큼 정치권은 개혁을 미루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개혁 없이는 중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의 성공담은 매력력을 잃고 말 것이다.

정리 이지연 KDI 경제뉴스분석팀 연구원

##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외신 평가 엇갈려

지난 6월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GDP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분기 GDP 성장률은 견실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속보치에서 소폭 둔화된 전년 동기비 1.3%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 중심의 수출 호조세로 1분기 상품 수출이 전년 동기비 19% 가까이 늘었지만,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고정투자가 위축된 것으로 드러나자 한은의 금리인상 시점을 두고서도 시각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 6월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에 앞서 *Bloomberg*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7명의 이코노미스트 중 9명이 금리 동결을, 8명은 금리인상을 전망하는 등 시장의 예상이 엇갈렸다. 8일 *Financial Times*(이하 FT)는 금리인상을 전망하면서도 “한은이 5월에 이어 6월에도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큼 세계 및 국내 경제지표가 악화됐다”는 전문가 견해를 전하며 국제 금융계가 한은의 금리결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와중에 한은이 목표치를 웃돌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사상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위해 올 들어 세 번째로 금리인상을 단행하자 *Wall Street Journal*(이하 WSJ), *FT*, *Reuters* 등 주요 외신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WSJ는 예상 밖 금리인상으로 원화 가치가 급등하고 주가와 채권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금리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다스리는 게 시급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Reuters*는 김중수 한은 총재가 5월에는 저축은행 부실채권 문제를 우려했으나 6월에는 인플레이션 대응에 중점을 두겠다는 쪽으로 어조를 바꿨다고 지적하면서 “대외불안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어 금리인상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의 반응을 전했다. 반면 *FT*와 *Bloomberg*는 이번 금리인상은 리스크의 무게가 인플레



지난 6월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위원들이 금리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션 쪽으로 쏠려 있다는 점을 인식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올 하반기에 금리가 0.5%p 추가 인상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외신들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 기업들이 금융위기 시기에도 눈부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관심을 보였다. *FT*는 6월 7일자 기사를 통해 10년 전만해도 신흥시장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 대량생산, 저가판매 전략을 통해 유기적 성장을 꾀하는 비교적 후진적인 사업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 이들이 성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가치사슬의 상위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FT*는 6월 3일자 기사에서 반도체와 휴대폰으로 유명한 삼성그룹이 1950년대에 모직물 사업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재벌기업들의 신사업 분야 진출을 심도 있게 다뤘다. 또한 *FT*는 재벌들이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약진했지만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서비스 부문 진출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맥킨지의 제언을 전했다. [내외경제]

# 재정, 국가경제 지키는 마지막 보루



**홍동호**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dhhong@mosf.go.kr

**지**난 2001년 9.11 테러는 세계 최강의 군사·방위력으로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던 미국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줬다. 그로부터 10년 후 미국은 또 한번 크게 자존심을 구기는 일에 처하게 된다. 바로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다. 지난 4월 국제 신용등급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무디스(Moody's) 역시 지난 6월 2일 정부 부채의 한도를 늘리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미국 재정상황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셈이다.

## 美 자존심 크게 구긴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유가 무엇일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미국의 심각한 재정상황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는 1조6천억달러(GDP 대비 비중 10.8%)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올해 국가부채가 GDP의 200%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S&P 등 신용평가기관들이 일제히 신용등급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그동안 방만한 사회보장성 지출로 만성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던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도 결국 과중한 재정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EU,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어떨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위기 이후 강력하게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가운데, 다행히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세수실적도 개선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그 회복 속도가 빠르고 양호한 편이다. 실제로 2009년 OECD 국가 중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3개 국가에 불과하고, 2010년에는 OECD 회원국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금융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극복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 원동력 중에 튼튼한 재정이 위기 극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위기에 대응해 적극적인 감세정책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신속·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했는데, 이는 건전한 재정의 뒷받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진국들의 재정위기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재정 여건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만은 않기 때문이다.

먼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가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고령사회에 도달하기까지 불과 18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본(24년), 영국(47년), 프랑스(115

넌 등 선진국들의 소요 기간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향후 의료, 연금급여 등 사회보장성 지출 역시 급격하게 증가할 것을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잠재성장률 저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2007년 KDI 추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4.0%, 2020년대 2.7%, 2030년대 1.8%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성장률 저하는 세입 감소를 초래할 것이고, 한편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R&D 등 재정지출 소요도 불가피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로 통일비용도 유사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위험 요소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지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GDP 대비 5% 수준의 통일비용이 소요됐다고 한다. 특히 통일이 언제 이뤄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미리부터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또 다른 경제위기다. 우리나라는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경제위기에 매우 취약하다.

### 복지지출 급증 대비한 재정건전성 강화 중요해

여기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종 복지지출 확대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무상복지나 반값등록금 논쟁 등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등록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은 보다 많은 국민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대학의 경쟁력 향상,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대학의 지구노력 극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원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매년 수조원씩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경우 국가 재정건전성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충분히 고민한 후에 정책추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복지 관련 지출은 한번 늘어나면 이후에는 줄이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무상복지 등 국내에서의 재정지출 확대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세계 각국은 경쟁이라도 하듯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혁

을 실시 중이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처음으로 향후 5년간 780억달러에 상당하는 국방비 지출을 삭감했다. 영국은 대학생,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학 보조금을 삭감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재정개혁 사례를 거울 삼아 미래를 대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국가 재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재정은 백지수표처럼 필요한 만큼 아무 때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방파제로서 굳건히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아래 재정건전화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입확충, 지출생산성 제고 등 구체적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2014년 31.8%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확대 유도 등 과표를 양성화하는 한편, 신규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정사업 중 성과가 미흡한 사업,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의 생산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도 장기 재정전망 실시 등을 통해 재정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국가 재정을 정부의 노력만으로 지속적으로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모든 경제주체가 재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무상복지 등 당장에는 솔깃하지만 후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주장들에 대해선 머리를 맞대고 그 득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겠다. 박영재

東班

西班

#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The Return of the *Ogyujanggak Uigwe* from France:  
*Records of the State Rites of the Joseon Dynasty*

2011. 7. 19. ~ 9. 18.

Special Exhibition Gallery, National Museum of Korea



京畿監司

後射隊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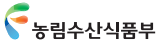


右廂將



- 48 2020년까지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35% 감축**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11~2020년)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50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산·학·연·관 역량을 집중**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22개 신규 과제 선정  
지식경제부
- 52 교통사고 사망자 700명 감축 추진**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확정  
국토해양부
- 54 사물지능통신(M2M) 장비·서비스 무료로 시험한다**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 개소  
방송통신위원회
- 56 무인전자세관 통해 통관행정 획기적으로 개선**  
통관서비스 선진화 방안  
관세청





## 2020년까지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35% 감축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1~2020년) 수립

**최** 근 일본 원전사고로 우리나라에서 겪게 된 변화 중 하나는 식탁에서 생태(生太)가 사라진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시원한 생태탕을 즐기면서 우리나라에선 왜 명태가 잡히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기후변화와 연관시킨 사람은 많

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우리의 식탁주권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영향에 비해 기후변화 자체는 아직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공통 관심사가 돼 가고 있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UNFCCC)을 채택해 급격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해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이념에도 불구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농수산식품산업

농림수산식품산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는 농수산물 수급 및 생산구조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사과와 같은 주요 농작물의 재배지가 점차 북상하고 있고, 제주지역에선 이미 망고와 같은 아열대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수산업 분야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림수산식품산업 분야 기상예보 전담기관인 ‘(가칭)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1차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에 대비해 ‘농림수산식품 분야 탄소상쇄사업’도 시행한다.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의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 30여년 동안(1980~2009년) 약 90%(6만2천톤→11만7천톤) 증가했다. 반면 한류성 어종인 명태는 1980년에 약 10만톤기량 어획했으나 2009년에는 약 1톤만이 어획되는 데 그쳤다. 또한 빈번해진 이상기상은 농작물 수급불안 및 가격폭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기온상승에 따른 배추무름병 발생으로 인해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평년(25만2천톤) 대비 40% 감소(15만1천톤)해 포기당 가격이 1만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세계평균을 상회하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속도를 감안하면,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 일부지역에 해당하는 아열대 기후지역이 태백산지 및 소백산지를 제외한 서해안, 동해안 중부까지 확대돼 농림수산식품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상기상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식량공급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림수산식품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위기대응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차원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1~2020년)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금까지

지 산발적으로 추진돼 오던 농림수산물 분야 기후변화 정책을 포괄하면서 중장기적 차원에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농업·축산·수산·산림 등 주요 분야의 정책을 체계화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함으로써 농림수산물 산업이 선제적·체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35% 감축, 산림 분야 온실가스 흡수량 전망치 6% 향상' 및 '이상기상 예측 등을 통한 수급불안 해소'를 목표로 농업, 축산, 수산, 산림, 수자원 및 식품·유통 등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조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R&D' 추진

농업 분야에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물 걸러대기 확대, 무경운('경운'은 땅을 갈아엎어 작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함) 농법 도입 방안 연구, 화학비료 절감 등 저탄소 농법을 개발·보급하고 에너지 절감 시설 및 목재펠릿(pellet)·지열·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확대·보급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농식품 체인을 유지하기 위해 쌀 등 주요 작물의 예측모델을 구축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예측능력을 강화하고, 주요 농작물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 품종도 개발해 나간다.

축산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이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사료 및 장내발효 기술개발을 통해 반추가축(되새김질 동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나간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사양기술을 개발하고 온난화 유래 질병의 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수산 분야는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을 통해 바다의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어선어업의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도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간다. 또한 한국형 어장환경 예측기반 구축 등을 통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예측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등 양식산업 발전을 지원함

으로써 기후변화의 돌파구를 만들 것이다.

산림 분야에선 국제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인 산림의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훼손된 산지 복원, 유휴토지 조림, 수종갱신 등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고, 숲 가꾸기로 기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조림 등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도 도입해 나갈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식생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편백·백합나무 등 기후적응 범위가 넓은 수종으로 지역별 산림구조를 개편해 나가고,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

끝으로, 수자원 분야에선 다목적 용수개발, 저수지 둑 높임 등을 통해 2020년까지 4억m<sup>3</sup>의 농업·농촌용수를 추가 확보하고, 저수지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한다. 식품·유통 분야에선 물류효율화, 녹색식생활운동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간다.

이상의 분야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물 산업 분야 기상예보 전담기관인 '(가칭)농림수산물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1차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에 대비해 '농림수산물 분야 탄소상쇄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R&D를 기획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업 부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3% 미만에 불과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이상기상과 같은 수급불안 요인 발생 시에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국가경제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 **단문** **위계**



**강형석**  
농림수산물부  
녹색미래전략과장  
smiler78@korea.kr



#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산·학·연·관 역량을 집중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22개 신규 과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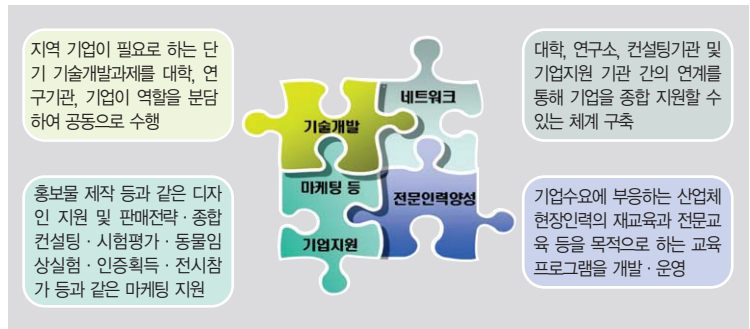
**지**식경제부는 올해 586억원을 투입해 90여개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RIS)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22개 사업을 올해의 신규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사업이란 지역발전의 주체인 산·학·연·관이 연계해 지역 연고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크 연계 및 기업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다. 여기서 ‘연고자원’이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닌 유·무형의 자원으로, 관련 기업과 지원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산·학·연·관이 연계해 지역 연고자원을 발굴

그간 RIS사업은 2004년부터 실시돼 2010년까지 총 6,086억원(국비 3,673억원)이 소요됐고 2011년도에는 586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RIS사업은 2010년까지 총 142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으며, 2010년 중에는 전국적으로 76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 실시됐다.

2011년도에는 22개 사업이 새로이 선정돼 향후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까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신규 과제를 직접 기획·평가 및 선정함으로써 지역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림〉 RIS사업의 정의



〈표 1〉 RIS 연간 사업비 추이

(단위: 년/100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 비	50,000	55,000	52,670	49,100	51,100	55,700	53,700
지방비	10,254	13,340	13,665	11,157	10,878	12,574	12,246
민간부담	18,202	25,259	24,677	20,530	20,750	24,900	22,878
합 계	78,456	93,599	91,012	80,787	82,728	93,174	88,824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 중 RIS사이트(www.ris-sale.com) 초기화면

올해 선정된 과제는 제조·가공(10개), 생활소재·디자인(5개), 기계·부품(6개), 기타(1개)로 분야별로 고르게 분포됐다. 특히 지역별로 집적도가 높고 산업파급 효과가 큰 기계·부품 분야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조·가공 산업도 단순가공이 아니라 지식과 아이디어가 결합된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 창출을 지향하고 있어 의미가 커졌다.


### RIS제품 판로 개척해

#### 실질적 성과 향상에 힘써

RIS사업의 성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구축 성과가 본격화된 2008년부터는 기술개발의 사업화와 매출액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 고용창출도 크게 늘어나는 등 RIS사업은 지역산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나서 우체국 쇼핑몰(www.ris-sale.com)을 운영하고 RIS마케팅지원사업단을 가동하는 등 RIS제품의 판로 개척에 의한 실질적 성과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대학 등 지역혁신 주체들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2011년에 신규 지정된 과제들도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결집된 지역의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실용제품 개발 및 사업화가 실시되는 한편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들은 해당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원동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표 2〉 2011년도 RIS사업 신규 과제 내역

시도	기초지자체	사업명	주관기관
서울	성북구	성북패션창조지구 조성을 위한 디자인 붐제 혁신 네트워크 구축	한성대
부산	금정구	수송기기 융복합 유기부품소재산업 지원	부산대
	강서구	토마토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산업화 지원	신라대
대구	북구	대구약령시한방특구 한방산업 경쟁력 강화	경북대
인천	옹진군	인천꽃게 가공산업 육성	수산종묘배양연구소
대전	유성구	융합지원 혁신시스템 구축을 통한 금형산업 육성	한남대
광주	북구	고령친화형 생체부품소재산업 육성	전남대
울산	남구	석유화학 부생(유)황을 활용한 저탄소녹색 건설자재 개발 및 실용화	울산대
경기	용인시	광융합산업 핵심부품 및 제품화 지원	단국대
	양구군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 산업체계 구축	강원대
강원	동해시	동해 견운모 활성화	관동대
	청주	녹색성장 누에산업 프리미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충북대
충북	공주시	백제문화소재 현대산업화를 위한 고부가브랜드디자인	공주대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관광 Trail형 기능성 명품주 육성
전북	임실군	임실치즈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무주군	무주 웰니스식품산업 육성	전주대
전남	해남군, 장흥군, 완도군	황칠소재산업 가치사슬(value-chain) 연계 강화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천연자원연구원
	장흥군	장흥해조류 자원의 파워브랜드화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목포대
경북	영덕군	동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약선식품 브랜드화	대구 한의대
경남	산청군	산청 고령토를 활용한 고기능성 제품화	경남대
제주	제주시	녹색자원 기반의 제주형 고부가 승마산업 육성 프로젝트	제주대
	제주시	Green Island 양채류를 이용한 웰빙기능성식품 전략육성사업	제주대

〈표 3〉 주요 성과지표별 RIS사업 성과

지원내용(년)	2007	2008	2009	2010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307회	377회	590회	741회
기술의 사업화(제품화)	119건	156건	167건	220건
사업화 매출액(100만원)	71,594	180,070	355,615	430,000
고용창출	1,271명	1,527명	2,355명	2,377명
경영상담 지도	1,101건	865건	1,159건	1,468건
디자인 지원	1,925건	1,196건	1,623건	1,289건
전자상거래(마케팅) 지원	142건	309건	479건	407건



**송현민**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장  
song@mke.go.kr



## 교통사고 사망자 700명 감축 추진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확정

**각**종 교통수단의 발달은 인간에게 편리함과 신속성 등의 이점을 제공하며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키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교통사고, 환경파괴, 에너지 문제 등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해 우리 삶의 질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특히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인명의 손실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가져왔다. 2010년 한 해 동안 자동차·철도·선박·항공기 등에서 22만7,762건의 사고가 발생해 5,730명이 사망하고 35만2,642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년 대비 발생건수는 2.2%(5,153건), 사망자는 4.8%(288명), 부상자는 2.6%(9,487명) 감소한 수치이다. 이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50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6%를 차지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교통안전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망자수가 2001년 8,097명에서 2010년 5,505명으로 줄어 들었으나 아직도 일본·영국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진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2009년 OECD 평균인 1.25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2.57명(2010년)이다.

###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유관업계 취업 제한

정부는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따라 도로 교통 분야의 경우 올해 사망자수를 4,800명 이하로 줄이고자 하며(12.8% 감소), 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로이용자의 행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음주·과속 운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태 개선을 위해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버스·택시 등 직업운전자로

의 취업을 제한하고, 현행 3단계의 과속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해 기준속도의 60km/h를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17.9%(979명)를 차지하며 비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교통사고율이 높고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것이다. 부칙이 의무화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에 대한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과학적인 운전행태 분석과 운전자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해 무자격·미숙련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도로시설과 자동차 안전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로시설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국도·지방도 500여개소), 위험도로 개량사업, 선진국형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도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차 안전도 평가 제도를 개선해 종합등급제를 실시하고, 자동차 안전도 정보 제공을 위한 라벨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차량소통 중심의 교통안전대책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보행우선구역 지정·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생활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을 통해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구역 내 교통안전도를 강화하며

어린이 카 시트, 어린이 안전모, 실버 마크 배포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국민들의 교통안전도 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교통안전대책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고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조사 및 교통안전 시범도시제도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시범도시는 교통안전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교통안전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으로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 간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교통안전사업 추진체계와 추진모형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조사는 사고율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통안전 인력·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발표해 지자체의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선의의 경쟁도 유도할 계획이다.

### KTX 고장 최소화 위해 부품 교체주기를 단축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도를 유지·달성하기 위해 철도·해양·항공교통 분야의 여러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철도교통 분야는 철도 고장사건이 자주 발생해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KTX차량의 고장 최소화를 위해 KTX 주요 부품의 교체주기를 단축해 특별 관리하고 질병·음주·피로 등 기관사 승무적합성 검사를 내실화해 인적 요인에 의한 철도사고를 최소화할 것이다. 안전조직을 수송조직과 분리해 독립시키고 기동안전점검팀을 운영하는 등 철도공사의 안전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할 것이다. 스크린도어, 안전발판 등 승강장 안전설비 확충, 철도건널목 입체화,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 등 철도시설의 안전성 향상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철도사고 발생을 'zero'(0)화하고 열차사고 발생건수를 8% 감축(1억km당 열차사고 발생건수; 2010년 14.2건 → 2011년 12건)하고자 한다.

해양교통 분야는 선박 안전성 확보 및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규 교육기관, 단기 양성과정을 통

**음주·과속운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태 개선을 위해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버스·택시 등 직업운전자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현행 3단계의 과속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해 기준속도의 60km/h를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세분화된 4단계 과속기준

20km/h 이하	20~40km/h	40km/h 이상	60km/h 이상(신설)
벌칙금 3만원 벌점 없음	벌칙금 6만원 벌점 15점	벌칙금 9만원 벌점 30점	벌칙금 12만원 벌점 60점(면허정지)

해 우수한 해기사를 지속적으로 양성·배출할 것이다.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PSO)를 강화하고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안전을 확보하며 선박모니터링시스템과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해 해양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전년 대비 31명 감소시킬 계획이다.

항공교통 분야는 항공안전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항·자격·관제 등 기술·안전 분야를 총괄한 '항공안전법'을 제정하고 사고사례 위주로 실무지도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레이더 등 항행안전시설을 첨단장비로 현대화하고 제2항공교통센터 구축 등 항공안전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 10만 비행횟수당 사망사고율을 0.059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12.8%(700명) 감소는 전년 감소율 5.7%에 비해 쉽지 않은 목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중앙정부, 지자체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전 좌석 안전띠 매기, 자전거 안전모 착용, 운전 속도 준수 등은 작은 노력으로도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것들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통안전과 교통문화의 수준은 한 단계 상승하게 될 것이다. [국회]



**김형석**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장  
teddy96@korea.kr



# 사물지능통신(M2M) 장비 · 서비스 무료로 시험한다

##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 개소

2009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물지능통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에서 사물지능통신(M2M; Machine-to-Machine)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생소한 용어로 들리겠지만, 사물지능통신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교통과 날씨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u-쉘터(u-Shelter) 지능형 버스정류장, 원격 무선카메라를 이용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원격진료가 가능한 u-헬스케어 서비스, 어린이·부녀자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 서비스 등의 기반기술이 모두 사물지능통신이다.

### 기계와 기계가 통신하고 판단하는 시대

사물지능통신은 통신·방송·인터넷 인프라를 사람 대 사람, 사람 대 사람 간 영역으로 확대·연계해 사물을 통해 지능적으로 정보를 수집·가공·처리해 상호 전달하는 서비스다. 처음 사물지능통신 개념이 도입된 1990년대 초반에는 원격조정이나 차량 무선통신 서비스인 텔레매틱스 정도의 개념으로 인식됐고, 파생되는 시장 자체도 매우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유무선 통신기술이 고속 발전하고 인터넷 생태계가 거듭 진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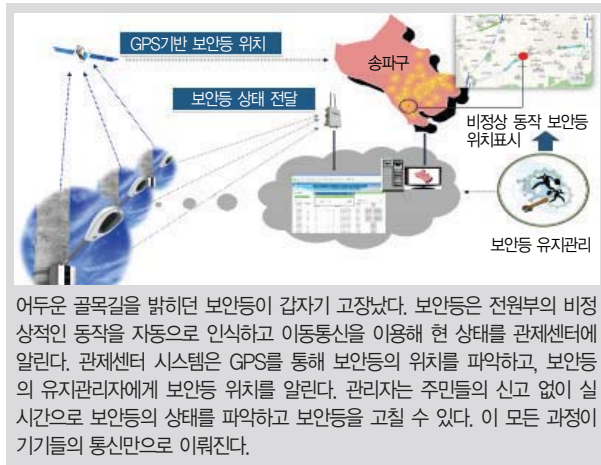


사물지능통신 장비와 서비스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이 지난 5월 23일 서울 금천구에서 있었다.

시장조사업체인 Bell 연구소는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사물지능통신 기기의 수가 2010년 20억개에서 2020년 1천억개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IDATE는 메이저 이동통신 사업자를 중심으로 스마트 사물지능통신 사업전략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글로벌 사물지능통신 시장이 2010년 20조원에서 2014년 45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에서도 사물지능통신 시장은 차량·물류·안심·건강·원격검침을 중심으로 2010년 2조3천억원에서 2014년 7조6천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사물지능통신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임에 따라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그림〉 서울 송파구의 '지능형 보안등 관리 서비스' 사례



다양한 정부 정책을 준비·추진 중에 있다. 유럽에선 2009년 '사물인터넷 액션플랜'을 발표했으며 2014년에는 전 차량에 e-Call(GPS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차량 사고 등을 관제하는 기능)을 적용할 예정이다. 미국은 사물지능통신 기반의 스마트그리드 등에 34억달러를 투자하는 '그리드(Grid) 2030계획'을 수립했고, 중국 역시 2010년 상하이 인근에 사물지능통신 관련 산업단지과 연구센터를 구축했다. 일본은 2009년에 사물·기기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이 포함된 'I-JAPAN 전략 2015'를 수립하고 2010년 4월에 5천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실증시험을 시작했다.

### 종합지원센터 통해 단말·모듈 등 조기 상용화 지원

국내에선 방통위가 사물지능통신 시범사업 발굴과 포럼 등의 운영, 핵심기술개발과 국내외 표준 추진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난 5월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를 서울 금천구에 구축했다. 국내 사물지능통신 모듈 및 단말 관련 업체(120여개)와 플랫폼 S/W 및 응용 서비스 관련 업체(240여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사물지능통신 환경에서 시험해 사업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는 사물지능통신 모듈 및 단말, 플랫폼 S/W, 각종 응용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테스트

베드(testbed)다. 국내 사물지능통신 중소기업 및 연구자들은 센터를 통해 테스트비용을 절감하고 모듈·단말의 출시시간을 단축하는 등 조기 상용화를 위한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는 기업, 학계, 연구소 및 일반인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 이용기관은 중소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시험·검증을 위해 각종 센서, 서버,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계측·분석 장비, 모니터링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주요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모듈 및 단말(통신모듈, 전용단말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다. 즉 센서와 모듈·단말 간, 모듈·단말과 유무선 네트워크 간에 동작 및 통신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테스트한다. 무선 네트워크의 경우 우선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GSM(유럽 이동통신방식), WCDMA(3G)를 대상으로 하되 향후에는 LTE(Long Term Evolution) 및 WiBro(4G)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플랫폼 S/W(보안·과금·인증·DB 등) 및 응용 서비스(차량 위치추적 등의 LBS(위치기반 서비스), 원격점검, 원격의료 등)에 대한 시험·검증으로, 플랫폼 및 서비스 등을 서버에 설치해 사물지능통신 환경에서의 실행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

자동차·냉장고·전기·수도·가스 등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를 상상해보자. 일반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더욱 쉽게 얻을 것이고, 기다리는 시간 등 낭비되는 시간도 훨씬 적어질 것이다. 기업들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영 활성화, 신규 서비스 창출 등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편의 및 발전의 기반은 사물지능통신이다. 사물지능통신 관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사물지능통신 분야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바로 '사물지능통신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다. 김정렬



**김정렬**  
방송통신위원회 지능통신담당장  
jrkim111@naver.com



# 무인전자세관 통해 통관행정 획기적으로 개선

통관서비스 선진화 방안

**오** 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액 1조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 지식경제부는 수출은 지난해보다 9.8% 증가한 5,130억달러, 수입은 14.6% 증가한 4,880억달러로 무역액은 1조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실적을 보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6.7% 증가한 2,272억달러, 수입은 26.4% 증가한 2,131억달러로 연초에 예상한 수출입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글로벌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발효를 코앞에 둔 EU와의 FTA로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FTA 시대로 진입해 무역액 증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입신고, 365일 실시간으로 처리

과거 주요 선진국들은 무역액 1조달러 진입에 즈음해 급격히 증가하는 무역량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통관행정 선진화 대책을 추진해 왔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1993년 「세관현대화법」을 제정해 수출입 절차 전산화, 적하목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등의 통관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이들 선진국 사례를 보면 공통된 두 가지 흐름을 갖고 있다. 하나는 세관절차 개선을 통한 화물흐름의 신속화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화물의 적극적 통제다. 이와 같은 맥락 아래 정부도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관서비스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무인전자세관을 도입한다. 성실성 및 자율관리의 역량이 있다고 입증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기업의 수입신고는 앞으로 세관직원에 의해 처리되는 대신 전산시스템을 통해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세관의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신고한 즉시 시스템에 의해 처리됨에 따라 통관 편의성은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시행 원년인 올해 전자세관 이용비율은 전체 수입신고 건의 10%까지, 2012년에는 20%, 2013년에는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세관 이용비율이 30%까지 확대될 경우 연간 물류비용은 약 2천억원 상당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세관의 도입은 수입신고 처리를 위한 세관인력 운영에 탄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신고서 처리에 투입되던 인력을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이나 현품검사에 투입함으로써 탈세와 원산지 조작 등 불법·부정물품의 단속효과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둘째, 선사나 항공사가 수출입화물의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는 시기를 앞당긴다. 화물선적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제도는 이제 글로벌 규범으로 확산되고 있

정부는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무인전자세관을 도입한다. 성실성 및 자율관리의 역량이 있다고 입증된 기업의 수입신고는 앞으로 세관직원 대신 전산시스템을 통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처리된다. 세관의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신고한 즉시 시스템에 의해 처리됨에 따라 통관 편의성은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직원들이 수입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수출의 경우 선적 전까지, 수입의 경우 입항 24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어 국제 조류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50% 이상이 이 제도 시행국가로 향하고 있어 더 이상 도입을 늦추기도 어렵다. 적하목록 제출시기가 당겨지면 수출의 경우 상대국 세관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펄자 주; 적하목록을 적기에 제출하지 못하면 하역이 금지되고, 화물검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방지할 수 있다. 국내 세관절차상론 선적 전 24시간부터 제출된 적하목록정보와 수출신고내역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수출신고 후 선적 직전에 물품을 바뀔지 하는 불법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수입의 경우 상대국에서 출항하기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이 제출되므로 입항 전 수입신고와 같은 신속통관제도의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다만 이 제도의 시행은 업계의 준비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우선 시급한 항공화물과 해상수출화물부터 시행하고 해상수입화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환적화물 원산지 세탁 뿌리뽑는다

셋째,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불법 환적화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유치에 따른 부가가치 효과를 고려해 세관절차를 대폭 생략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항을 경유해 제3국으로 향하는 외국화물 중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세탁된 물품이나 가짜상품이 증가하

고 있다. 또한 EU와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를 앞두고 한국의 항구를 의도적으로 경유해 자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시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세관에서는 단순가공·재포장 수출이나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 우범정보 공유 등 효과적 공조체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다. 단,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의 통제가 정상적인 환적화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역규모가 증가하고 교역국이 다변화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다. 수출기업은 해외에서 세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관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현지세관과의 마찰을 우려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단을 구성해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접수·관리하는 한편, 관계부처·경제단체 및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국·중국·EU·아세안 등의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정례화하고 통관애로사항을 주요 협상의제로 채택하는 등 관세의 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관세관과 현지법인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역역 1조달러 시대에 걸맞은 선진통관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향후 5년 내에 우리 경제가 무역역 1조5천억달러 및 수출 5대 강국으로 무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경제국경 최일선에서 무역 원활화와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인



**이찬기**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netzar@hanmail.net

# 우리 생활 구석구석 ‘반짝반짝’ 빛나게!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는 국민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정책과제를 발굴·실행함으로써 생활 구석구석을 보듬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 바쁘게 뛰고 있는 그들의 어깨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바쁘다>에서 그들이 일하는 현장을 구경해 보실까요?



이성인 과장



채현숙 주무관, 최영호 사무관

**행** 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는 지난 2008년 8월 15일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 경영의 중심에 두고, 생활공감정책을 대폭 발굴·실행하겠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신설된 생활공감 업무와 옥외광고물, 온천, 공중화장실, 공공디자인 등에 대한 종합개선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복합부서로서 이성인 과장을 중심으로 생활공감정책팀·생활공감개선팀 총 13명으로 짜여 있다.

###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

우선 생활공감정책팀에는 김진수 팀장과 최영호 사무관, 이금희·채현숙·김소영·김정희 주무관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이루며 생활공감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전국 1만여 명의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뒷받침을 하고 있다.

선한 미소의 최영호 사무관과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이금희 주무관은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담당한다. 현재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발굴은 주부모니터단이 주축이 돼 상시 공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과 공무원에 대하여도 일정기간을 설정해 공모하고 있다. 이제까지 총 5만4천여건이 접수돼 1,400여건이 정책으로 채택됐다. 이 중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과제는 467건인데, 해당 부처에서 소관과제별로 점검한 결과 99% 정도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민들이 제안한 생활공감정책은 1차 분류 작업을 거친 후 관련 부처로 전달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처리 절차를 맡아 사후관리까지 완벽하게 실행하는 채현숙 주무관, 김소영 주무관, 김정희 주무관이 있어 언제나 든든하다.

맞벌이부부들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야간반 운영,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부모에게 SMS로 통보, 마트의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대체 지급하는 등의 정책은 국민제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생활공감정책이다.

생활공감개선팀은 김원석 팀장과 정진호·황승완 사무관, 김길수·우은정·김정섭 주무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업무는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 온천, 공중화장실 개선 등이다.

전국의 옥외광고물은 총 526만개로 이 중 53%가 불법 광고물로 도시경관 훼손 등 도시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진호 사무관과 김정섭 주무관은 특유의 적극성을 발휘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마철을 맞아 풍수해 대비 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통행,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단속을 지자체 주관으로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는 데



(왼쪽부터) 김길수 주무관, 이금희 주무관, 황승완 김진수 팀장, 김정희 주무관, 정진호 사무관 사무관

김원석 팀장, 김정섭 주무관, 우은정 주무관

힘을 보태고 있다.

### 국민에게 감동주는 생활환경 개선 추진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황승완 사무관은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관련 법령 제도개선 연구, 건축·디자인·도시계획·경관 등의 전문가 23명으로 지역 공공디자인 포럼을 구성·운영했으며 강변 자전거 길과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등 우리 부의 공공디자인 사업 컨설팅 지원과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0개소의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매년 확대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계획이다.

언제나 부지런한 김길수 주무관은 온천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천이용 붐 조성 등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온천법령 운영, 온천수요 창출을 위한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를 비롯해 온천로고 변경, 온천의 수위변동·이용량·온도 등의 상시관측을 위한 온천자원 관측시스템 시범설치, 온천수 효능·효과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온천의 치료적 효과를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온천제도를 운영하고, 보양온천제도 조

기 정착 및 온천수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 온천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온천발전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은정 주무관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책임진다. 2004년 세계 최초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 조성,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지자체 활동 지원, 한국화장실협회 등 공중화장실 관련 4개 단체와 공동으로 화장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물 부족에 대응하고 비용절감 등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 16개 지역에 공중화장실 중수도(빗물이나 취사한 물 또는 목욕탕의 물을 정화해 별도의 관으로 보내 수세식화장실·살수 따위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수도) 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설을 2020년까지 전국 2천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점차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생활공감정책과의 모든 업무는 국민과 함께할 때 '반짝 반짝' 빛나는 일이 된다. 국민들의 정책 제안과 과원들의 '두 발로 뛰는' 노력이 합해 조금씩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예사롭게 지나칠 수도 있는 좁은 골목을 이리저리 살펴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들처럼 작은 실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공감정책과 구성원들. 이들은 모두 이미 '생활의 달인'이다. **박재민**

글 김진수 생활공감정책팀장



## 노사관계 선진화, 성과와 남은 과제는?

노사관계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복수노조 시대가 열렸고, 타임오프제는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정부가 지난해를 '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노사관계 지표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28.9% 감소했다.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도 지난해 처음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노사관계 선진화의 추진 경과 및 앞으로의 과제를 정책담당자와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 노사관계의 과거와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매우 불안했다가 최근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의 관행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고 노동조합 간부의 급여를 사용자가 지불하는 관행이다. 이 때문에 노사관계 개혁이나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 과제로 이 두 가지 관행의 개선이 떠올랐고 이를 위한 「노동법」 개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반대하고, 재계는 복수노조 허용을 반대해 왔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시행을 13년간 유예했다. 그 결과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의 유예로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고 노조는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사용자와 투쟁하는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 지난해 국민적 공감대 속 새 노조법 통과돼

노사관계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회는 지난해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도록 법을 바꾸고 동시에 노조간부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사용자의 노조간부에 대한 임금지급을 규제하는 새로운 「노조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국회에서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노조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이 가세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일각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조법」의 통과로 노조간부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는 타임오프제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거의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노조법」의 또 다른 중요한 조항인 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사는 복수노조시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노조법」을 숙지하며 조직을 점검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고, 전임자 급여의 노사 자율결정과 복수노조의 자율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과거의 관행을 유지하지는 주장인데 현재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간부의 기득권 관점에서 보면 일리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회사의 직원 이면서 노조의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특별한 권리다. 양대 노총은 이러한 특별한 권리를 유지하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복수노조 설립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사업장 내 여러 개의 단체협약이 난립하고, 이로 인한 노사관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교섭 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을 교섭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도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운영의 일부 관행은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어떤 모임이라도 회원들이 돈을 내고 그 돈으로 모임을 운영하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하고 사용자에게 대해서 투쟁을 벌이는 모순이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의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관행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권리를 노동기본권이라고 하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의 하위법인 「노조법」은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으면 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이 법조항 때문에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번번이 문제를 제기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기 어려워지고 근로자들이 노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노조간부들이 일반 조합원을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노동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 노사관계 관행 과거로 되돌릴 수 없어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아 조합 활동을 하고 근로자들이 노조를 선택할 수 없는 관행은 노동운동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조의 일을 하며 회사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노조에는 이런 저런 명칭을 가진 간부들이 자연히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복수노조를 만들 수 없으니 하나의 노조에 계파가 난립하게 되고 계파끼리의 싸움은 노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들어 왔다.

노조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노조법」은 사회적 공감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수많은 노사관계 전문가들이 연구했고 법 제도 운영의 주체들인 노사정의 대표들은 무려 13년 동안 머리를 맞대어 왔다. 뿐만 아니라 「노조법」 개정의 당사자인 국회는 노사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법의 시행을 번

번이 유보했지만, 새로운 「노조법」은 여야가 어렵게 통과시킨 것이다. 따라서 법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재개정하면 이를 주도하는 정치권은 일반국민들의 반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 운영과 노사관계 관행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 사용자는 물론 노동조합도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적어도 일반국민들의 눈높이이라도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타임오프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복수노조 설립 허용의 시행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노조법」을 재개정하지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동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노사정은 물론 국회도 새로운 노사관계 법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가장 큰 숙제는 일자리 문제다. 노사의 관심이 복수노조 허용이나 노조간부의 급여지급 문제를 넘어 소득양극화 문제와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옮겨져야 한다. 고용과 임금 결정 등에 작용하고 있는 기득권의 장벽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청년이나 여성 등의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해 소득양극화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노동법」을 개정한다고 해결되기 어려우며 노사의 협력과 양보가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는 수출 제조업이 노동집약형에서 자본집약형으로 전환되는 동안 내수 분야인 서비스업을 육성하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전통적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지 못했고 서비스산업은 서비스산업대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큰 시각을 갖고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나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withkim21@naver.com

## 이달의 이슈

노사관계 선진화, 성과와 남은 과제는? | 인터뷰

# “노사관계, 일자리를 더하는 ‘블루오션’ 만들 것”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노사관계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를 ‘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복수노조 시대가 열렸고, 타임오프제는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을 만나 노사관계 선진화의 추진경과 및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금융 선진화 등 ‘선진화’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선진화란 무엇을 뜻하나?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은 ‘합리성’의 추구라 할 수 있다. 그간 우리 노사관계는 공장 점거, 공격적 직장폐쇄 등 불법 투쟁과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행들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노사관계 선진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노사관계가 ‘분규 없이 안정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성과를 높이고 일자리를 더하는 ‘상생·협력의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우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을 개정했다. 또한 그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사관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도록 지도해 왔다. 개별 사업장에서 일터혁신이 이뤄지고 노사 간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사 간 상생·협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과 홍보를 통



해 다른 기업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변화가 반영돼서인지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의 노사관계 부문이 지난해 56위에서 3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수치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점차 협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나 일부 대기업 강성노조의 투쟁 지향적 노동운동 등 대립적 모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행히도 ‘노사관계는 대립적’이라는 이미지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근로자 1천명당 근로손실일수는 30.2일로 집계돼 OECD 평균 이하를 기록했고, 노사분규 또한 총 86건이 발생해 교섭단위 기준으로 집계한 이래 최저 수준을 보였다. 사업장이나 지역 차원의 노사협력선언도 집계 이후 점차 늘어 4,012건을 기록한 것도 우리 노사관계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뀌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노사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노사관계와 일자리 창출의 관계는?**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필요조건이다. ‘노사안정’에서 더 나아가 ‘노사협력’이 이뤄지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을 가져오고 일자리 창출까지 달성할 수 있다. 최근에는 노사가 함께 일터를 혁신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도입 과정에서 산업 현장에 혼란은 없었나?**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많은 우려가 있었다.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 전부터 업무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대상 사업장의 89%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했고, 합의한 사업장 대부분이 법정 한도를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면회의 등의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관서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그간 우리나라는 기업 내 복수노조가 금지돼 국제사회로부터 ‘노동후진국’으로 지탄받아 왔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11차례나 복수노조 시행을 권고해 왔다.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 노동조합 간에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 근로자가 중심이 되는 노동운동이 정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기업경영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이라 본다. 또한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만큼 대외적 평가도 개선돼 노동후진국의 오명

을 벗고 국격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돼도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면, 결국 신생노조나 소수노조의 목소리는 배제되는 것 아닌가?**

기업 내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교섭질서가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교섭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기업 내 여러 노조 중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대표노동조합’을 정하면 교섭질서의 혼란을 막으면서 노조의 교섭력도 높일 수 있다.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개별교섭도 가능하다. 소수노조가 차별받지 않도록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수노조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보완제도를 함께 마련했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노사관계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복수노조가 생기면 노조 간 선명성 경쟁으로 노-노 간 세력다툼이 심해져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정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 노사와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맞춤형 컨설팅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엔 사업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위원·조사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며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사 양측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지난해 4천억달러가 넘는 수출액과 6.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이는 노사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IMD에서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세계 22위로 평가할 만큼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부족, 사회 양극화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사가 기존의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서로를 파트너로 인식하고 성과를 ‘더하는’ 블루오션의 노사관계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도 ‘일하는 사람은 더 즐겁게 일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정착단계로 접어든 타임오프제

**타**임오프제가 도입 1년을 맞았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등 일정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입 당시에는 “오랫동안 당연시해 오던 관행이 쉽게 바뀌겠어?”, “노노 및 노사 간 갈등만 일으켜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등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리고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사용자로부터 전임자 급여를 지급받던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5월 말 현재 사업장 89% 도입

그러나 당초의 우려와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달리 산업현장에서는 타임오프제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 시행 초기인 2010년 7월 말에는 64.1%의 사업장에서 노사

가 합의해 타임오프제를 도입했다.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2011년 5월 말 현재는 89.0% 사업장에서 도입했다. 또한 합의한 사업장 중 99.0%의 사업장이 타임오프제의 한도 내에서 합의하는 등 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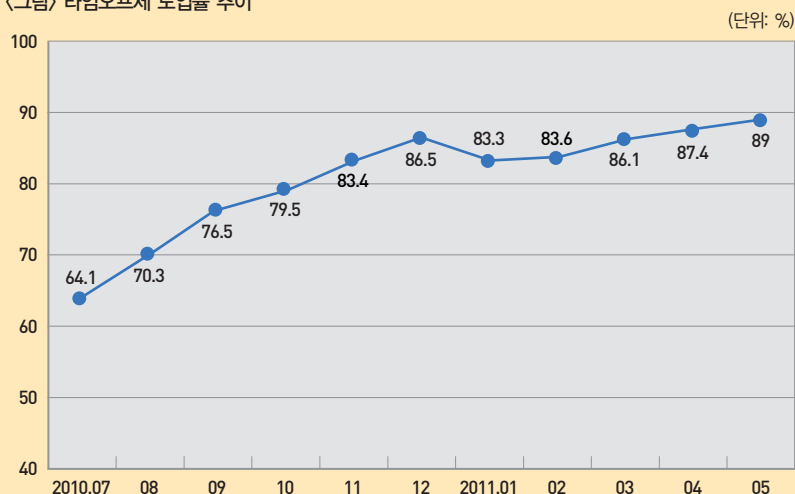
정부는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행 전부터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산업현장의 노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제도 시행 후에는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타임오프제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산업현장의 노사가 법을 준수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통해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원만한 정착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행 초기에 일부 노동단체에서 개정된 「노조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던 사실을 일반국민들도 언론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단체의 요구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던 종전의 불합리한 관행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법을 준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신고했으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이면합의를 한 사업장도 점검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다.

노사의 자율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

(그림) 타임오프제 도입률 추이





(왼쪽)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새벽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한 뒤 기자들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 KT(회장 이석채)와 KT노동조합(위원장 김구현)은 지난 5월 27일 단체교섭을 타결함으로써 11년 연속 무분규 단체교섭을 달성했다. 이번 타결 내용에는 타임오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임금 3% 인상 등이 포함됐다.

나 그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전임자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거나 타임오프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사업장 대부분은 정부의 지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정했다.

자율 시정이라는 정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2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조합원을 위한 노조로 변모하는 계기 돼

한편 타임오프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지나치게 많았던 전임자 수가 약 30% 정도 줄었다. 중소기업도 노동조합보다는 방만하게 전임자를 운영하던 대규모 노동조합에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동안 전임자 급여 외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음성적으로 운영비를 제공하던 것을 적발해 이를 시정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타임오프제 외의 무급 전임자는 노사 자율로 정하고 무급 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함으로써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고, 노동조합 재정이 투명화되는 계기가 됐다. 노동조합 간부를 위한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모습은

언론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이율리 노동조합 간부의 변화된 행태에 대해 조합원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고 있다.

지금까지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가 협상테이블에 앉았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노사가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이다. 타임오프제를 통해 합리적으로 노조활동을 해 나가면서, 노사 상생과 일자리 중심의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노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야당과 여당에서 각각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계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정 논의는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산업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주체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 기대해 본다. 나라경제



**오영민**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단 팀장  
oyeongmin@moel.go.kr

# 노사관계 선진화의 새로운 이정표 될 '복수노조'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를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노동조합의 금지에서 허용단계를 거쳐 현재는 설립과 활동에 대한 적극적 보장단계로까지 발전했다. 동시에 조합원 개인과 사회 이익 보호를 위해 민주적 운영에 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제 단순히 하나의 현상을 넘어 자본주의 사회의 불가결한 제도로 발전했다. 기업은 노사관계의 공정성과 산업평화를 위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설립한 노동조합과 불편하더라도 공존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경험을 갖게 됐다.

### 복수노조로 노사관계 대화채널 다원화돼

그러나 우리 노사관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을 인정하는 과잉보호를 오랫동안 유지했다. 여기에는 단순히 노동조합의 과잉보호 차원을 넘어 정치적 의도도 강하게 내포돼 있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1차례나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보장하라고 권고했고, OECD도 지난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단결권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복수노조의 금지에 의한 노동조합의 과잉보호는 우리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보편적 이익 구현에 관심을 갖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이른바 독점의 효과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난과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이미 1997년 복수노조의 도입을 허용하는 「노동법」의 개정이 이뤄졌으나 그 시행이 유예된 지 13년 만에 오랜 기간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복수노조가 그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것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질서의 중대한 전환

점이 될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복수노조의 설립은 노사관계의 대화채널이 다원화됨을 의미한다. 산업구조가 단순하고 근로자 수가 적었던 과거에는 근로자 간의 이해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단일노동조합 제도는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없다. 이해관계가 서로 같거나 비슷한 근로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고유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독자적인 노동조합을 필요로 한다.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이 근로자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거나 분열을 초래해 사용자 지위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그보다는 이 기회에 고용형태, 직무내용, 직급 등에 따라 서로 구별됐던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큰 틀에서 조율하고 협력해 공통분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적·제도적 기반을 갖게 됐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진정한 단결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없다.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또는 일반직이든 전문직이든 자신이 원하는 노동조합을 선택해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들이 서로 더 많은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경쟁과 균형의 문화가 정착되면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운영상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기대효과다.

**창구 단일화 틀 안에서  
노조 이해관계 조율돼야**

반면 우려도 적지 않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는 무엇보다 교섭창구 단일화로 교섭대표노조에서 배제되는 노동조합, 특히 소수노조의 단결권이 침해된다는 점이다. 단결체가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면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면 수궁이 가는 문제제기다. 그렇지만 집

단적 노사관계의 핵심과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다. 쟁의행위를 행사해 기업과 대립적·투쟁적 관계를 조성하는 것만이 집단적 노사관계의 목적인 것은 아니다.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촉진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노사 간 대화 주체가 다수라고 해서 단체교섭 자체가 여러 개로 갈라지고 근로자의 세력이 분열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복수노조 때문에 조직 대상이 중복되고 근로조건이 동등하게 적용돼야 할 근로자 간에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경쟁적으로 교섭되고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빈번한 교섭과 쟁의행위는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이는 노사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노동조합이 언제나 투쟁적이고 적대적으로 사용자와 대립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노동조합이 출현해 경쟁적으로 사용자에 대해 요구를 쏟아 낸다면 기업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복수노조의 당위성과 교섭질서의 효율성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가 앞으로 남은 중요한 과제다. 단체교섭은 하나의 게임이다. 그렇기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규칙이 있어야 한다.

복수노조는 근로자들에게 분명히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관철할 수 있는 가장 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5월 27일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복수노조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직원들이 감성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상적인 제도다. 그렇지만 교섭창구는 노사관계의 안정과 교섭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안에서 노동조합 간에 이해관계의 조율과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이질적인 근로조건과 협약정책을 가진 노동조합이라면 교섭단위를 분리해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는 교섭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에 참여하지 못한 소수노조와 그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공정대표 의무 준수 여부가 철저하게 감시돼야 한다. 사용자는 각 노동조합에 대해 중립을 지키면서 협력적·상생적 노사관계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동반자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수노조는 설립 가능성만으로도 노동조합 간 선의의 경쟁을 촉발시켜 불투명하고 담합적인 노사관계의 관행을 혁신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을 아우르는 전체 근로자의 보편적 이익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라경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jis-park@daum.net

## 이달의 이슈

노사관계 선진화, 성과와 남은 과제는? | 일터혁신 우수기업: 하이닉스반도체

# “아무리 어려워도 월급만큼은 제대 지급됐죠”

허현국 하이닉스반도체 노경팀장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부문이 지난해 56위에서 3단계 상승했다. 노사분규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25% 감소했다. 타임오프제도 우려와 달리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노사가 함께 ‘일터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는 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일터혁신 컨퍼런스’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일터혁신을 널리 알려 참여를 촉진하고 국·내외 일터혁신 동향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해에는 인적자원관리의 공정성, 참여와 협력성 등 분야별 일터혁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제시됐다. 또한 기업이 자기 기업의 혁신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가진단방법도 소개됐다. 중소기업(동해금속, 롤앤롤, 중앙전력) 세 곳, 대기업(동부익스프레스, 신세계 이마트, GS칼텍스, 하이닉스반도체) 네 곳, 공기업(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한국서부발전) 세 곳 등 10개 기업이 대상을 수상했다.

‘나라경제’는 지난해 ‘일터혁신 컨퍼런스’에서 대상을 받은 하이닉스반도체를 찾았다.

**지난 6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곳(하이닉스반도체)으로 달려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고용창출에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2008~2009년 유휴인력 1,876명에 단 한 명의 감원도 없이 교육과 재배치를 실시했다. 2005~2010년까지 1만3,469명(기술사무직 3,838명, 생산직 9,631명)을 채용했다. 또 지역 내 인력양성과 청년실업 해소에도 앞



장서며 현재 4년제 대학 11개교, 2년제 대학 4개교와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직원들을 단 한 명도 감원하지 않았다. 사측에서 경영 부담은 느끼지 않았나?**

대신 노조에서 많은 양보를 해줬다. 개인별로 2주간 무급휴직을 했고, 반납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모두 반납했다. 장비이설 등 외부에 용역을 주던 일들도 우리 손으로 직접 했다. 평사원들은 감원

하지 않는 대신 일부 고위 임원들의 구조조정은 있었다(웃음). 이렇게 노사가 협력한 결과, 유휴인력이 정상화되는데 1년 반 정도가 걸렸다.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24년간 無분규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건전노사관계 유공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안정화된 노사관계를 넘어 협력적 노사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

우리라고 노사 간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그 갈등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특별한 비결은 없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그 외에도 수시로 얼굴을 보고 있다.

**LG반도체와의 빅딜 장기화와 합병(1999년) 등으로 조직 갈등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나?**

LG반도체의 반발이 컸지만 통합 이후 회사의 노력으로 안정을 찾았다. 양쪽 회사의 복지·인사 제도 중 좋은 것들은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 회사 복지제도는 종류가 아

주 다양하다. 사원과 가족 등이 참여한 대화합 결의대회도 했고, '노사불이(勞使不二; 노사는 둘이 아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비석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노조위원장과 사장이 커피잔을 끼는 등 '신노사 운동'을 전개했다.

**2001년에도 한차례 위기가 있었다. 미국의 마이크로에 매각될 뻔 했는데, 당시 상황은 어떠했나?**

매각을 막기 위해 노조가 직접 나섰다. 회사를 팔지 않게 해달라고 금융감독위원장, 채권단을 직접 방문했다. 사측에서는 사업 구조조정을 시작해 LCD 등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19개 사업을 모두 매각했다. 당시는 회사가 전 기요금을 내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절박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월급이 제때 다 지급됐기 때문이다. 나도 이 이야기를 한참 후에 들었다. 모든 것은 다 줄이면서 직원들 월급만큼은 제때 지급했던 이 사건으로 노사 신뢰는 한층 더 두터워졌다. 위기가 기회가 됐다. 회사가 어려울수록 노사는 더욱더 단단하게 뭉쳤고, 그런 노력으로 2004년부터 성과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2004년 영업이익 2조200억원을 기록했고, 2005년 워크아웃을 1년5개월 앞당겨 조기 졸업했다. 지난해에는 영업이익이 3조3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성과를 냈다. 여기에 노사관계가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나?**

반도체 업계는 그 어느 곳보다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잠시도 방심할 수 없다. 10년 전 선두를 달리던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몇 개나 남아 있는지를 본다면, 경쟁의 강도를 실감할 수 있다. 특히 일본과 대만의 경쟁사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데다 대형 업체들도 이익만 맞으면 국적이나 사업영역을 뛰어넘어 손을 잡는 추세라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래서 더욱 긴장해야 한다.

노조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임금 최대 35% 삭감, 무급휴가 실시, 연차 소진 등을 자청했다. 공존이나 공멸이라는 갈림길에서 공존을 택했다. '다물(多勿)프로젝트'를 가동해 생산단가 절감과 수출(투입 수에 대한 완성된 양품(良品)의 비율) 향상 작업에도 돌입했다. 다물이란 '옛 땅을 되찾는다'는 뜻의 고구려 말이다. 제조본부에서는 단위당 생산비용을 낮추고, 수출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가동



지난 6월 1일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반도체 후공정 생산라인을 방문, 회사 관계자로부터 제품생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시간 내에 생산 효율의 극대화를 꾀했다. 마케팅본부에서는 모바일 D램, 멀티칩패키지(MCP) 등 기존 고부가가치 제품 이외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의 발굴 및 시장조사 등을 담당했다. 여건을 탓하지 않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사를 일으키겠다는 의지였다.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주력했다. 회사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2008년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도 총 7천여억원을 R&D에 투자했다. 2009년 하이닉스가 내놓은 차세대 메모리 44나노 DDR3 D램 신제품은 이런 전사적 노력의 산물이다.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고 들었다.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고충은 무엇인가?**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이다. 기숙사 시설, 구내식당의 질, 통근버스 운행 등 일상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사업장은 60% 정도가 여성 근로자인데, 3교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육아 문제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경기도청의 지원을 받아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다. 직원교육 등을 통해 예방에 힘쓰고 있고, 고민에 대해서는 기숙사 사감선생님을 중심으로 상담 등을 하고 있다.

**복수노조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새로운 노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처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나라경제]

## 이달의 이슈

노사관계 선진화, 성과와 남은 과제는? |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LG전자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 · 경영자 · 노조 모두의 몫

**최** 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노동조합주의(unionism)의 새로운 대안으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 Union Social Responsibility)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경향이 새로운 노사관계의 구성과 발전에 어떠한 자극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 또한 확대되고 있다. UN, World Bank, 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의 CSR에 대한 관심과 이러한 흐름의 종합인 'ISO 26000'의 제정으로 노동조합 또한 사회 속에 배태된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

하는 역할을 넘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 동반자적 관계로 재정의되는 주주와 노동자

이렇듯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조직의 역할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흐름의 이면에는 전통적인 기업관의 변화가 내재한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목적과 기능은 주주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주 중심주의적 기업관은, 최근 기업의 목표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또는 상충하



LG전자 노동조합은 지난해 초 사회적 책임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서 구호활동을 펼쳤다. LG전자 박준수 노조위원장과 노조대표단 20여명이 캄보디아 씨엠립 주의 꼭젠마을에서 배식지원을 하는 모습

는 이해를 수렴해 조정하고 공통의 선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는 이해관계자 중심적 기업관과 경쟁하게 됐다.

전통적 주주 중심주의적 기업관 하에서 기업의 목표는 수익성 제고와 주가로 대표되는 기업가치의 유지에 있었다. 따라서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인 주주(또는 이사회)와 노동자들(또는 노동조합)의 이해는 상충하는 관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중심적 기업관 하에서 주주와 노동자들은 다양한 외부의 이해관계자 그룹들과 상호작용하는 기업주체로서 협력적이며 동반자적 관계로 재정의됐다. 이에 따라 양자 간 이해관계의 성격 또한 변화됐다.

이러한 전환의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내부 구성원이자 기업의 실질적 주체인 주주와 노동자 나아가 경영자 집단 각각의 사회적 책임이 통합된 결과로서 인식되게 된 것이다. 요컨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와 경영자 그리고 노동조합의 통합적 사회책임으로 확대 정의되게 됐다.

한편,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7~1989년의 노동자 대투쟁 시기를 지나면서 역사적 발전을 경험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 고용불안정의 심화 등을 배경으로 기업별 노조의 핵심적 기반이 돼온 정규직 중심 대기업 노동조합의 보호주의적 노조주의(protective unionism)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됐다. 아울러 노동조합주의와 노동운동의 위기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인 노사관계의 변화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이 대두하게 된 배경이 되고 있다.

### LG전자,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개념 최초로 적용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여러 사례 가운데에서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USR)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개발하고 적용한 LG전자의 사례는 전통적 노동조합주의와 노동운동의 경계를 넘어서는 대안적 노동조합주의(alternative unionism)로서 노사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LG전자 노조는 2010년 1월 28일 조합원의 권익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노조의 자기책임을 정립하는 '노조의 사회적 책임 헌장'을 선포했다. 이와 같이 LG전자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확대다. 진정한 의미에서 조합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울타리

내에서 조합원의 권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생활반경이 단지 기업 울타리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 외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권·지역사회·지구환경 등 외부의 문제들을 간과한다면 조합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인식이 이러한 새로운 노조주의의 모색을 자극했다는 것이다.

둘째, USR이 최근 기업경영의 화두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나아가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다. 'CSR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원만하고 생산적인 노경(勞經)관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LG전자 노동조합의 판단이다. 요컨대 최근의 CSR 전략이 기업 내 이해관계자 그룹의 개별적 책임의 합으로서 인식되며 노동조합의 사회책임 활동 또한 기업의 사회책임 영역의 한 범주로 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LG전자 USR 활동이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스스로가 사회적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전통적 노동조합주의 하에서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역할은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였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직력의 위축으로 대변되는 노동조합의 위기와 시민사회로부터의 변화 요구 등에 직면해 노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조합원의 이익보호를 넘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통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필요가 등장하게 됐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LG전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공장 내 탄소배출 저감, 소비자 지향형 품질개선 활동, 지역사회 공헌, 협력업체 지원,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USR 활동 또는 노사의 사회적 책임 전략을 통해 노동조합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USR 활동은 노동조합주의의 대안적 재구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박희정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soonwori@sookmyung.ac.kr

## 이달의 이슈

노사관계 선진화, 성과와 남은 과제는? | 제언

# 복수노조 · 타임오프제 도입취지 잊지 말아야



지난 6월 10일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5번째)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본위원회에 앞서 최종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왼쪽 6번째) 외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한국 노사관계는 선진화되기는커녕 다시 후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회사에 대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고용불안이다. 외환위기 이후 사무직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감은 실제로 엄청나게 크다. 이들은

지난 13년간의 묵은 숙제인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타임오프제가 도입됐으니 현장의 노사관계가 변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노사관계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현장의 변화가 우리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안착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노사 당사자에 달려 있다.

### 화이트칼라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비가 필요

복수노조 허용 이후 예상되는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지금까지 생산직에 비해 노동운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직종, 즉 사무직과 연구·개발직에서 노동조합 설립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이제는 화이트칼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1987년 이후 생산직 노사관계에서 있어 왔던 대립적 양상이 사무직 노사관계에서 다시 불거진다면

당연히 보호막을 갖고 싶을 것이고, 노동조합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기업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무리한 구조조정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떠나는 자’들에 대한 보상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이란 그 희생은 떠나는 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그 이득은 주주와 남는 자가 다 가져가는 것이다. 고통분담, 이득분담의 관점에서 떠나는 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둘째, 장시간 근로, 과도한 업무 부담이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휴일에도 회사에 나가야 하는 등 대기업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과로사가 남 이야기 같지 않은 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어느 대기업은 퇴근시간이 항상 늦는 부서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만들어 해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과도한 근로시간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무직 노사관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보상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다. 연봉제 도입 이후에 개인 간 임금 차이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능력주의 인사관리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한국 대기업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재무팀의 목소리가 인사·노무팀의 목소리보다 컸던 것이 사실이다. 복수노조 시대를 맞으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회사실적 제고와 노사관계 안정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는 방향에서 임금격차의 적정수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노사정 협의 채널 긴밀히 가동해야**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노사 모두 착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복수노조 허용은 노조 설립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한 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혹시 몇몇 기업들이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노조를 새로 만들어서 노조를 분리·통제하려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노조는 일단 설립된 이후에는 사용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없다.

또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노노갈등은 노사갈등보다 해악이 더 크다. 노노갈등은 노사갈등보다 기업에 훨씬 더 나쁜 것이다. 근로자들 간 불협화음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 비용은 파업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노동조합도 서로 분열하면 노동운동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안 그래도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서로 분열하면 노동운동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다.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일부 소수 기업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타임오프제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 사용자는 조합비를 인상할 만큼 별도로 임금을 추가 인상해주고, 노조는 그것을 기반으로 조합비를 인상해서 전임자 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임오프제를 왜 도입했는가?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지만 그것이 전임자 수



인천지역 노사정 대표들의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한마음대회가 지난 6월 16~17일 강원도 정선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를 지나치게 많아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도록 만든 것이다. 또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전임자 수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한도 이상은 노조 자체의 재정으로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우리도 만들어 보자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여전히 사용자의 돈으로 전임자를 많이 두는 관행이 계속 유지된다면, 타임오프 상한선을 충실하게 지킨 다른 기업들의 노사는 무엇이 되는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어느 대기업에서 가장 먼저 변칙적인 방법을 수용했다는 소식에 어이가 없었다. 노사 간 파워게임으로 정해질 것이라면 애초부터 타임오프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부터라도 타임오프제 도입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변칙적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규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법 개정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정이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정부가 노사정 협의 채널을 지금보다도 더 긴밀하게 가동해 새로운 환경변화가 현장에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다만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rhee@mju.ac.kr

# 꾼

‘꾼’이라는 접미사는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 ‘어떤 일을 즐겨 하는 사람’,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의 뜻을 더해 준다. 그런데 ‘어떤 일을 즐겨 하는 사람’의 뜻에는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첨가돼 혼용되기도 한다. 즐겨 하다 보면 전문이 되어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저 그 일을 습관적으로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 순간 그 ‘OO꾼’은 ‘어떤 일, 특히 즐기는 방면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이는 명사 ‘꾼’이 되고 만다.

“그 사람 꾀야, 꾀.” 많은 이들이 자신을 이렇게 부를 때 그 사람의 전문 분야, 즉 즐기고 잘하는 분야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머물러선 안 되는, 떠나야 하는 분야가 아닐까 하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그리고 그 분야란 소위 춤, 노름, 노래 같은 노는 분야만이 아니라 강연, 집필, 방송을 포함한 사람의 전문 분야 일체와 일상의 대화까지가 아닐까.

애긴즉슨 이렇다. 어떤 일에 시간과 공을 들여 익숙해지고 노련해져 갖게 되는 능란함의 경지는 참으로 애매하고 위험한 경지다. 쓸 내용이 고이지 않았는데 원고 청탁에 응하거나 책을 지속적으로 내는 행위. 가끔 자기계발서나 심지어 소설을 읽을 때도 속이 팍 차 있지 않은 만두를 베어 물 때처럼 그 비어 있음에 가슴 아플 때가 있다. 방송인 또한 마찬가지다. 신입사원의 티를 벗고 중견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면서 매일매일의 방송에서 긴장이 사라진다. 이러한 방송을 하는 이에게 시청자도 똑같이 신선하지 않은 느낌을 받는 건 당연하다. 오래 가는 방송인은 능란함의 직전 상태로, 2% 부족한 느낌을 주는 대신 늘 꾸준한 사람이다.

대화나 이메일에 있어서 이 사람이 너무나 이런 대화를 많이 해 보았고 상대에 대한 아무런 설렘과 기대도 없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영업사원이나 114 교환수 등 어느 정도 매뉴얼에 기반한 기계적 관계는 어쩔 수 없다 치고,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함에 있어 늘 남에게 하던 대로 나를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나는 물화(物)됨을 느끼며 그와 더 이상의 일도 말도 하고 싶어지지 않는다.

강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강연을 하는 자에게 스피치, 강연은 타인에게 도달하는 방법이며, 강연을 듣는 자에게는 그 스피치를 통해 새로운 내용과 함께 마음의 울림을 얻는 기회이다. 그런데 강연자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 열심히 응시하는 청중의 눈을 보며 더한 감동을 자아내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 순간을 확 닦아채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들었다 났다 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그 욕망대로 관성대로 그렇게 하는 순간 그는 강연에 있어 ‘꾼’이 되고 만다.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매달 동숭동 서울연극센터에서 열리는 세 편의 강연 ‘책으로 만나다’ 가운데 ‘책 영화와 만나다’를 진행하는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의 강연을 지난달 들으러 갔다. ‘책 세상과 만나다’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필자로서, 영화에 있어 전문가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해서였다. 깊이 알고 느끼고 있음에도 물 흐르듯 담담하고 자연스러운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 꾀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곤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순간 너무 자아가 강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됐다.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나의 전문성과 지식으로, 나만의 특수성으로 일에 임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버리는 일이란. 그러나 분명하다. 어떤 일이 잘 수행되는 신비라 나는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절제의 칼날을 베풀어야 오래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무림의 고수가 된다는 것. 나의 명제



**유정아**  
방송인/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연구위원  
jayoo7@snu.ac.kr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89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KBS 9시 뉴스', '열린 음악회' 등을 진행했다. 1997년 퇴사 후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KBS 1라디오 '명사초대석' 과 국회방송 '원로에게 듣는다'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유정아의 클래식 에세이, 마추찐, 「유정아의 서울대 말하기 강의」 등이 있다.

# 우측보행제도

지난해 7월 우측보행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역사 속에 왜곡된 우리의 보행제도를 바로잡고 오른손잡이가 많은 사람들의 신체적인 특성을 이해해 보다 안전한 보행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다.

자연스럽게 우측보행이 이뤄지면서 우려했던 것과 달리 큰 혼선은 없었다. 제도의 정착률을 점치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는 이유다.

『나라경제』는 시행 1년을 맞은 우측보행제도의 도입과정과 의미를 짚어봄으로써 우리의 보행문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수저드는 오른손을 잊지 말고 우편으로 갈지며 앞만 볼지니”\*

\*1921년 4월 대구에서 불린 우측보행 교통선전가 중에서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의 교통수단은 일찍이 인력거, 손수레, 우마차 정도뿐이었다. 1903년 고종의 즉위 40주년을 기념하고자 미국 공관을 통해 리무진 승용차 1대를 의전용 여차로 들여온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다. 당시 자동차는 미국 형식과 동일하게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했지만 사람이나 우마차에 대한 규칙은 없었다. 통행의 혼선이 빚어지자 대한제국 경무청은 1905년 보행자와 우마차의 우측통행을 제정하고 빠른 정착을 위해 단속까지 했다.

그러나 우측통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즈음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우리나라의 통행방식이 일본과 반대라 불편하다며 1921년 통행방향을 바꿔 좌측통행을 시행했다. 일본군이 칼을 좌측에 차고 다녀 칼끼리 부딪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있으나, 혹자는 이를 문화말살의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라 풀이하기도 한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면서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미군정은 1946년 차량의 우측통행을 시행했으나 사람의 통행은 자율준중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때부터 ‘차량은 우측, 사람은 좌측’이라는 혼란스러운 통행패턴이 만들어졌다. 한편 북한은 1947년 보행자 통행 역시 우측으로 바꿔 남과 북의 보행방향이 달라졌다.

이후 몇 번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자동차의 통행방향에 관해서만 명문화했을 뿐 사람의 보행은 규정하지 않았고 어느 틈엔가 우리의 의식에는 좌측보행이 남아 있게 됐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차량 속에서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해 1만명에 이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5천여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표〉 2009년 보행 중 사망자 수 및 비율

	계	자동차 승차중	이륜차 승차중	자전거 승차중	보행중	기타
인원수(명)	5,838	1,978	771	333	2,137	619
비율(%)	100	33.9	13.2	58.7	36.6	10.6

절반 이상이 보행자였고, 횡단보도 위의 사고가 또 그의 절반이었다.

“횡단보도에서 우측통행을 하면 차와 멀리 떨어져 사고를 줄일 수 있겠다!”

이런 발상을 한 어느 국민 한 사람의 제안으로 그간 우리나라 통행의 역사 전체가 재조명됐다. 이후 우측보행으로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은 1994년 ‘횡단보도에서의 우측통행’을 권고했고, 2007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동일하게 교육을 했다. 그러나 복도나 기존 보도의 좌측보행은 유지된 상태라 헛갈리는 교육은 그대로였다.

국민제안의 주인공인 황덕수 우측보행국민운동본부장은 “학교에서 좌측보행을 배우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질서가 지켜졌을 거다. 좌측보행은 오른손잡이가 많은 사람의 본능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활도구를 활용할 때도 혼란을 준다”며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는 회전문과 육상 트랙 등을 예로 들었다. 2007년 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 검증을 거쳐 2010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우측보행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무려 좌측보행 시행 89년 만의 일이다. 나의 경제

# 사회적 혼란 줄이고 보행안전 높이는 ‘착한 습관’

**김정표**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사무관

## 우측보행제도 도입 경과?

좌측통행은 신체적 특성에 맞지 않고, 세계적 추세와도 다른 데다 안전을 위해서는 사람과 차가 마주 보고 통행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이 2007년 있었다. 정부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5개월간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시행방안을 찾기 위해 2008년 추가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우측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고, OECD 국가 중 낮은 교통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측보행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기존의 보행문화를 바꿀 만큼 필요한 것이었나?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인간의 뇌파실험에서 우측통행을 할 때 스트레스와 심장박동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면통행으로 교통사고는 20%, 지하철 환승통로의 충돌횟수는 24%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횡단보도에서의 우측통행은 1994년부터 경찰청이 권장하고 있었고 2007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횡단보도 우측통행을 교육해 보행방식을 통일하는 것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 시설물 개선에 따른 비용이 부담스럽지는 않았나?

보행통로와 계단은 화살표만 붙이면 되고,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 등은 모터의 회전방향만 바꾸면 돼 시설물 개선비용은 거의 없었다. 간단한 조치로 한국철도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의 시설물 3,089개가 개선됐다. 동선상 불가, 일방통행 등의 이유로 개선이 어려운 969개의 시설물엔 안내문을 부착하게끔 협조를 구했고 향후 역사(驛舍) 개

축 때 단계적으로 고치기로 했다. 여기에 2017년까지 국고 2,3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대형병원이나 마트와 같은 민간기관의 반발은?

개선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되레 고객들의 충도를 줄이는 동선이 확보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쇼핑이나 관람하는 곳은 이미 오른쪽 기준인 곳이 많아 더 편리해졌다고 들었다.

## 제도를 알리면서 가장 주력한 부분은 무엇인가?

우측보행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미 몸에 익은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무리다.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해서 참여하도록 하려 했다. 이를 위해 안내표시 및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했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학교 등의 협조를 구했다. 올해 말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측보행 교육콘텐츠와 동영상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 제도 시행 1년이 지났다. 앞으로의 계획은?

여러 기관과 국민들의 협조로 우측보행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확대됐다. 하지만 정량적으로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간혹 ‘나는 우측보행을 잘하는데 상대방이 안해서 불편하다. 더 많이 알려 달라’는 민원전화를 받을 때가 있다. 국민들이 우측보행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고맙다. 머지않아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본다. 자연스럽게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할 계획이다.

나의 경제

표초희 나라경제 기자

# “통행속도 빨라지자 시민들이 먼저 반겨”

**강주욱** 서울도시철도공사 5호선 신길역장

## 신길역은 언제부터 우측보행을 시작했나?

정부의 우측보행제도 시범 실시에 맞춰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좌측보행에 익숙하던 시민들이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왜 안 그렇겠나. 처음 며칠간은 시민들도 많이 불편해 하는 것 같았다. 우측과 좌측 보행이 혼재돼 오히려 더 통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역의 경우 시행 20일 정도 되니 어느 정도 정착이 되더라. 특히 사람들이 가장 봄비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모두가 우측보행을 하고 있다.

## 우측보행이 빠른 시일 내 정착한 이유는 무엇으로 보나?

일단 구조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역은 1호선과 5호선이 만나는 구간이라 환승통로가 다른 역에 비해 제법 긴데 통로 중간에 상점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통행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 홍보에도 중점을 뒀다. 정부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나눠준 홍보물뿐만 아니라 우리 역무원들도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 우측보행의 문구나 지시선을 더 도드라지게 했다. 러시아워 때는 스피커폰을 들고 나가 다같이 홍보활동을 했다.

## 제도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

통행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의 운행방향도 바꿔줘야 했다. 한데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돌아가던 것을 변경하다 보니 작동하는 데 장애가 종종 나타났다. 예전엔 한 달에 10번 정도 이상이 있었다면, 운행방향을 바꾼 뒤에는 13~14번 정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는 에스컬레



이터도 우측보행에 잘 적응하고 있는 듯하다.(웃음)

## 우측보행 실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 통행속도가 빨라졌다. 걸을 때 서로 부딪치는 일도 줄어들고 동선도 짧아졌기 때문이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찾아와 우측보행을 하니 예전보다 걷기가 편하고 통행도 쉬워졌다고 말한다.

## 역장으로서 ‘우측보행제도’에 대해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없나?

환승구간의 경우 운영기관별로 우측보행 홍보물의 디자인이나 문구가 다양각색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코레일, 인천지하철 등 각 기관마다 다른 홍보물을 만든다.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를 통일해줬으면 한다. 또 우측보행을 위해서는 기관 간 협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하철에서는 비교적 우측통행이 잘 지켜지는 편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우측통행을 했으면 한다. 조금만 주의하면 모두가 편하게 걸을 수 있고 ‘안전’도 지킬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에스컬레이터를 탈 땐 아무리 바빠도 두 줄 서기를 반드시 지키고 뛰거나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라경제

신지원 나라경제 인턴기자

# 홍보와 더불어 보행환경도 바꿔야

**보**행에 관한 본격적인 고민은, 교통안전이 심각한 국가 과제로 부각돼 각 분야별 해법을 모색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보행방식’ 논의와는 별개로 민간 연구기관이나 학자들 사이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우측보행’의 당위성이 제기돼 왔고 이에 관한 논리의 틀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다.

일제 강점기인 1921년 조선총독부가 정한 좌측보행 규칙은 긴 일본도를 좌측 허리에 장착한 보행자가 우측보행을 하면 교행에 불편이 초래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나, 그것은 또 인체의 고유특성에도 반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자기장의 영향으로 지구 북반부에선 반시계방향의 회전성이 형성되고 이를 역행할 경우 어지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등의 주장도 우측보행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이 같은 논의를 배경으로 우측보행은 2007년 국민제안과 언론을 통해 국민적 이슈로 부상했고,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2년여 동안 연구를 진행해 ‘우측보행’이 우리의 교통 체계에 적합하고 안전하며, 보행자의 편의에도 부합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후 2009년 10월 우측보행을 시범시행하고 2010년 7월부터는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펍 흥미로운 현상은, 국민 개개인의 행동양식의 변화를 요구한 ‘우측보행’ 전면시행이 예상과 달리 별다른 혼란을 부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범시행 초기 대도시의 지하철 역사나 대형 쇼핑몰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시설에서 다소 혼선이 빚어진 몇몇 사례 외에는 특별히 보행자의 동선 변경에 따른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차로변 보행자의 보행교통사고 역시 큰 변화가 없었고, 일부 지역의 경우 보행자 사고건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시설물 운영주체들이 보행자 동선 변경을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로 평가된다.

생각해보면 이미 우측보행 원칙이 적용돼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 호텔의 회전출입문이나 공항건물의 여객출입구는 좌측보행이 아닌 우측보행을 전제로 제작돼 있다. 또 등산로에 형성된 보행자 동선은 놀랍게도 우측보행이 절대적이었다. 이처럼 우측보행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잘못된 일제의 규칙이 오랜 세월 부자연스러움을 습관화시켰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반응도 예상을 웃돌았다. 시범시행 이전의 설문조사에서 ‘평소 우측으로 보행한다’는 응답은 21% 수준이었으나, 시범시행 이후 59%로 높아졌으며, 전면시행 단계엔 74%까지 우측보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말 측정한 우측보행 인지도는 93.3%로 나타나 다수 국민이 적어도 이를 ‘들어선 알고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우측보행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화되기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올바른 교통문화의 뿌리를 키워나간다는 자세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은 물론 우측보행에 적합한 보행환경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관습을 바꾸는 일은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획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  
pjw2cj@chol.com

\*2011년 『나라경제』는 연중기획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를 찾아간다.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꿈꾸는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기업의 형태이며, 이들을 이끄는 사회적기업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 새로운 CEO다. 이들이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한 이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 집중 조명해본다.

# 착한 기업이 만드는 따뜻한 세상

## 스코틀랜드 사회적 기업 현장 취재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KBS 국제부의 순회특파원으로 있었다. 순회특파원은 기자가 시사성이 있는 외국 현장에 가 취재하고 귀국해 방송을 만든 뒤 다시 출장을 나가는 것을 반복하는 형태의 인력 운용이다. 이렇게 취재해온 내용은 <KBS 뉴스>와 토요일 밤 방영되는 <특파원 현장보고> 프로그램을 통해 소화된다. 기자는 7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스코틀랜드와 페루, 카자흐스탄,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을 돌았다.

### 포스섹터, 정신질환자 고용해 직업교육 실시

사회적 기업은 '상생과 화합의 지구촌'이라는 2011년 신년 기획을 준비하던 중에 취재가 결정됐다. 스코틀랜드를 선택한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비교적 정부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활발하게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12월 말 이스라엘에서 군수 산업체 몇 곳을 취재한 뒤 파리를 거쳐 에든버러에 입국해 취재를 시작했다. 먼저 방문한 '포스섹터'(Forth Sector)는 정신질환자들을 고용해 직업교육을 시킨 뒤 산하의 여러 사업장으로 파견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직업교육 과정 자체를 정신질환의 치료로 본다. 산하 사업장으로는 게스트 하우스나 유기농 천연비누 제조 판매장, 세탁소 등이 있다. 교육을 마쳐도 노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수료생의 약 30% 정도가 일반 회사에 일자리를 얻고 있다. 나머지는 산하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을 하다가 부적응으로 포스섹터에 돌아오는 사람

들도 있다.

정신질환자들이 일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최고 경영자인 마이크 핀레이슨은 반대의 대답을 내놓았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 중에는 심신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큰 사람들이 많다. 이것이 오히려 교육에 집중하는 동기로 작용한다." 구직에 성공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훨씬 더 성실하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포스섹터는 이 점에 주목한 것이다.

다음으로 글래스고에 있는 와이즈그룹(Wise Group) 본사를 방문했다. 스코틀랜드와 북잉글랜드 지역에 9개의 지사를 둔 대규모 기업인 와이즈그룹은 실직자들에게 구직훈련과 직업알선, 상담 등을 해주는 일종의 재취업 알선 서비스 기관이다. 이곳을 거쳐 가는 사람만 일년에 1만8천명. 일년 매출이 우리 돈으로 약 600억원에 이르는데 이 중 40%가 영업이익이다. 외부 지원은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사회적 기업 키블(Kibble)은 정부의 용역을 받아 소년원에서 지내고 있는 청소년들을 교육한다. 불우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도 시키는데 중고 가전제품 수리·판매, 단독주택 수리·구조 변경, 자동차 정비, 지게차 운전 등 교육 분야도 다양하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외부 지원 의존도가 높다.

에든버러에는 사회적 기업 경영자들을 교육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라는 사회적 기업도 있었다. 이곳에는 리더십, 파이낸스, 상법, 조직관리 등 다양한



(위) 영국의 유명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불량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10년 전 런던에 설립한 레스토랑 피프틴(Fifteen)은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 됐다. 고급 식당 같은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는 허름한 4층짜리 벽돌 건물이지만, 영국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과 미식가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다.

(아래) 스코틀랜드 사회적 기업 키블(Kibble)은 정부의 용역을 받아 소년원에서 지내고 있는 청소년들과 불우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킨다.

강연과 토론, 워크숍이 이뤄지고 있었다. 미리 약속을 하고 취재 허락을 받고 갔지만 막상 도착하니 이사 중 한 명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해 취재를 허락할 수 없다며 촬영을 막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음 날이면 비행기를 타고 귀국해야 하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는 바람에 쉽게 화면에 담지 못했다. 신문이라면 기사를 만들 수 있지만 방송은 이와 같은 경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다룰 수 없다. 해외 출장 취재에서 종종 있는 그러나 가장 난감한 경우다.

### 정부·지자체 역할을 상당 부분 담당

스코틀랜드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을 상당 부분 사회적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용역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들이 구인-구직, 교육 시장에서 경쟁하며 정부 용역을 따내기

위한 수주전이 치열하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은 스코틀랜드 경제에서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데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맡고 있다. 유럽연합 사회기금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어느 기업이든 간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효과적 사업 운용을 통한 자립을 지향하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일에는 아직 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포괄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약자일수록 외부 지원도가 높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코틀랜드는 소규모 자영업자, 판매·납품 중소기업, 소규모 기술 사업장의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처럼 대형마트가 대부분의 판매를 독점하고 동네 상권이 신음하며 대기업이 자금력을 앞세워 온갖 부분을 삼키는 구조가 아니다.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통해 교육받은 사람들이 작은 비누 판매 가게를 열기도 하고,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살아갈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육성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성공 여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에 한정돼 있지 않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배출되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는 곳, 사회적 기업이 진출하는 시장은 대부분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시장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상생과 화합, 약자에 대한 배려는 사회적 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도 필요하다. 나라경제

\* 원고에서 다른 취재 내용은 2011년 1월 1일 KBS 1TV 특파원 현장보고 '착한 기업이 만드는 따뜻한 세상'을 통해 방송됐다. 인터넷 홈페이지(www.kbsnews.com)에서 무료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지형철**  
KBS 보도본부 국제부 기자  
nesaram@gmail.com

\*2011년 『나라경제』는 연중기획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를 찾아간다.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꿈꾸는 사회적기업은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기업의 형태이며, 이들을 이끄는 사회적기업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 새로운 CEO다. 이들이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한 이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 집중 조명해본다.

##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자발성을 강조하는 미국

미국은 사회적 기업 자체보다 기업가적 정신으로 사회적 난제에 혁신적 해법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더 강조한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구현하는 이가 사회적 기업가이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발현하는 조직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사회적 기업 논의가 혼돈스러우면서도 다채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사회적 난제에 혁신적 해법 추구하는 기업가

지난 5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청년 사회적 기업 창업 공모에 "TFK"(Teach For Korea)란 이름을 내건 팀이 응모했다. 미국의 TFA(Teach For America)에서 영감을 얻은 '한국판 TFA'였다. 1990년 웬디 콕이 창설한 TFA는 유명 대학 졸업자들을 교육 소외지역의 교사로 파견해 미국 공교육의 고질적인 교육격차 해소에 집중한다. 공교육의 질이 집값에 좌우되는 미국의 공교육 현실과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유명 대학 졸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적 기업가 콕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으로 절묘하게 결합된 것이 TFA다. 그렇다면 TFA는 사회적 기업인가?

TFA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성은 갖추고 있지만 수익사업을 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란 잣대를 들이대면 TFA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적 해법을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넓게 본다면 TFA도 그 울타리에 들어설 수 있다. TFA를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하

는 데 이견이 있겠지만 웬디 콕을 사회적 기업가로 부르는 데는 이론을 찾기 힘들다. TFA의 문제 찾기와 문제 해결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유감없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회·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교육 현실이 같지 않은데도 한국이나 유럽에서 지극히 미국적인 TFA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업 방식 자체라기보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TFA 못지않게 미국적인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발현되고 있는 것이 '프리랜서 유니온'(Freelancer Union)이다. 코넬 대학 로스쿨 출신의 노동변호사 새라 호로위츠가 2001년 만든 프리랜서 유니온은 전통적인 노동조합이 끌어안지 못하는 파트타임이나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도우미나 영세자영업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규직이 아니면 값비싼 의료보험 가입을 엄두도 내기 힘든 보건의료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호로위츠는 노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의 방식을 결합해 '움직이는 사회안전망'이란 새 틀을 창안했다. 단체교섭을 포기하는 대신 조합원에게 30~50% 싼값에 의료보험을 제공한다. 2008년엔 자체 보험회사(Freelancer Insurance Company)도 설립했다. 2007년 6월 5만명이던 조합원은 2011년 6월 현재 15만 5,900명으로 4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B기업'(Beneficial Corporation) 운동은 '정승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고 싶어 하는' 영리기업에서 발현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이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비영리단체 B랩(B Lab)은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라고 B기업을 정의한다.

B기업은 고유한 기업 문화는 안중에도 없고 부재지주처럼 배당과 투자수익만 챙기는 주주자본주의에 반대한다. 기업의 주인을 주주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소비자, 지역사회 등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로 보고,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당연한 일로 여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마케팅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존재 이유로 삼고 실천하는 기업이다. ‘착한 기



1990년 웬디 콕이 창설한 TFA는 유명 대학 졸업자들을 교육 소외지역의 교사로 파견해 미국 공교육의 고질적인 교육격차 해소에 집중한다. (사진)TFA에서 파견된 교사가 휴스턴 티에리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업 가운데 B랩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곳만 B기업 인증을 받는다. 자본 확충을 원하는 B기업에 대해선 기업문화를 존중하는 ‘착한 투자’가 제공된다. 2007년 6월 24개에 불과했던 인증 B기업은 4년 만에 422곳으로 늘어났다. 착한 기업 B기업이 착한 소비를 늘리는 선순환이 일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영리기업도 관통한다는 방증이다.

공공 부문도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예외가 아니다. 미국 미시간 주의 캘러머주 시는 ‘캘러머주의 약속’(Kalamazoo Promise)으로 유명하다. 2005년 말 이름을 숨긴 독자가가 2억달러를 쾌척하자, 캘러머주 시의 민관이 머리를 맞대 학비 지원을 통한 혁신적 도시 살리기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시의 공립학교를 다니는 기간에 비례해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캘러머주의 약속 시행 2년 만에 전입자가 2천명이나 늘었다. 2006~2010년 5년간 재학생은 16%나 증가했다. 주민이 늘면서 기업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은 캘러머주의 약속으로 5년간 지급된 등록금 총액은 1,800만달러. 시쳇말로 대박을 쳤다. 캘러머주의 사회적 혁신은 엘도라도, 덴버, 디트로이트, 뉴헤이븐, 피츠버그로 복제됐고, ‘약속의 도시들’(PromiseNet)이란 네트워크도 만들어졌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없었다면 캘러머주의 약속이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 배타성 없는 ‘사회적 혁신’에 중점 뒤

물론 미국에는 ‘사회적 목적에 충실하면서 스스로 돈도 버는’ 전형적인 사회적 기업들이 많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이래야만 된다는 배타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미국 사회적기업연맹(SEA)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구분하면서 사회적 기업가들을 폭넓게 품는다. 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증이나 지원도 따로 없고, 법적 지위도 보장되지 않는 미국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사회적 혁신의 내용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어차피 풀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다른 만큼 나라와 지역마다 사회적 기업은 알록달록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기업을 특정 틀에 가두기보다는 사회적 혁신을 주제로 다채롭게 변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중점을 두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기업 논의의 가장 미국적인 특성인 셈이다. [박]



**유병선**  
경향신문 논설위원  
ybs@kyunghyang.com

# 복지지출 확대,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

**복**지의 바람이 거세다. 처음엔 돈은 적게 들어가지만 상징성이 큰 무상급식 문제로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는가 싶더니 정작 경제적 부담이 막대한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에 와서는 둘 다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의 바람은 내년에도 강하게 불 것 같다. 사회안전망 확대의 필요성을 늘 주장하고 있었던 터라 필자는 이런 변화가 싫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 지출 분야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혹시 준비 안 된 복지지출 증가가 정부 적지와 부채 급증을 초래하진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당장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복지지출 확대를 대학 등록금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증세의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 하버드 맨큐 교수와 ‘공급경제학’

증세가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 보수 쪽 끝에는 공급경제학이란 이론이 있다. 정부의 소득세 수입은 세율에 소득을 곱한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세율이 증가하면 국민들이 덜 열심히 일해 소득이 급감하면서 세수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급경제학을 신봉하는 이들은 감세하면 세금이 더 걷히고,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



지난 가을 미국에서는 국회의원 중간선거를 앞두고 격렬한 부자감세 논쟁이 있었다. 최고 소득세율을 35%에서 39.6%로 복귀시키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감세철회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격돌했다.

가 더 걷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최고 소득세율이 40%를 밑도는 국가에서 공급경제학의 예측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경제학자는 찾기 힘들다.

탁월한 경제학자이며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경제원론의 저자이기도 한 하버드대의 맨큐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가장 한심한 경제이론으로 공급경제학을 꼽은 바 있다. 그러던 그가 부시 대통령의 경제수석이 될 무렵부터 공급경제학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가을 미국에서는 국회의원 중간선거를 앞두고 격렬한 부자감세 논쟁이 있었다. 최고 소득세율을 35%에서 39.6%로 복귀시키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감세철회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격돌하고 있던 와중에 맨큐가 뉴욕 타임즈에 칼럼을 기고했다. 요지는 이렇다. 그가 신문에 칼럼을 쓰는 것

“ 중요한 점은 증세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정치가들이 복지지출 증가를 주장할 때 세수확보 방법을 같이 논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노력은 복지지출 증가가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축소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

은 원고료 1천달러와 무관하지 않다. 원고료에 대해 35%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돈을 배당금,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율의 세금을 납부하면서 주식에 30년 동안 투자한 뒤 상속세를 내고 나면 2천달러의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런데 최고 세율을 39.6%로 올리면 30년 뒤 유산의 크기가 1천달러로 축소된다. 이렇게 노력에 대한 보상이 반 토막이 나면 그는 아마도 칼럼을 쓰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 복지지출 증가 주장할 때 세수확보 방법 같이 논해야

그의 ‘용기 있는’ 주장은 만파를 일으켰다. 야유가 대부분이었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논리는 필자에게도 설득력이 없다. 그의 뛰어난 학문적 업적과 대중의 비난을 무릅쓴 칼럼이 돈 때문이었다고 믿기 힘들다. 또한 작은 차이가 30년 누적되면 거대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복리의 미술을 이용해 증세의 부정적 효과를 과장했다는 의심도 든다. 그러나 소득세의 증가가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투자 수익률을 감소시켜 저축과 투자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경제학의 정설이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국민소득이 1천조원인 한국경제에서 조세부담률을 5%p 증가시키면 1천조원의 5%인 50조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단순 계산을 신뢰하지 않는다. 노동공급과 투자의 감소로 국민소득이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면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 이 중요한 질문에 결정적인 답을 제공할 이론과 통계는 없다. 경제학자들이 자주 쓰는 표준적인 성장모형을 사용해 대략적인 계산은 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소득세 인상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5%p 증가시키면 장기적으로 6% 정도의 소득 감소가 나타나고 35조원 정도의 세수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재산세와 소비세는 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은 세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첫째, 증세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공급경제학은 무시해도 좋다. 둘째, 복지의 보편성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복지한테 20조원을 더 건어서 이들에게도 복지 혜택을 확장해 주면 그 과정에서 소득감소라는 추가적 비용이 발생한다. 안 건고 안 주는 편이 낫다. 셋째, 재산세와 부가가치세를 이용하면 증세가 국민소득 감소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필자의 원론적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조세 전문가들도 많을 것이다. 또한 진보 측은 재산세와 소득세 증가를 통한 증세를 주장하고 보수 측은 부가세 증가를 통한 증세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재산세 증가는 부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부가세 증가는 저소득 가계에 더 큰 피해를 주는 역진성의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증세를 둘러싼 이러한 논쟁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정치가들이 복지지출 증가를 주장할 때 세수확보 방법을 같이 논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노력은 복지지출 증가가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축소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나라경제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eysong@sogang.ac.kr

## 공정사회로 가는 길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공정사회를 지향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위정자가 백성이나 국민을 위한다는 소리는 결국 다수의 서민들도 함께 잘 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미국에서는 정작 10만부도 팔리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0만부 이상 팔렸다. 우리가 얼마나 정의와 공정을 갈망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무엇이 공정사회인가? 흔히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며, 가진 자의 양보와 덜 가진 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가 공정사회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사회의 개념은 뭔가 부족한 면이 있다. 아무리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출발과 과정이 공평하다 해도 결과가 공평하지 못하면 공정사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사회는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행복한 사회’이다. 법과 원칙을 지키다가거나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은 공정사회로 가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곧 공정사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당국자는 이 점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무엇이 공정사회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러한 공정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일을 몇 사람이 밀실에 모여 앉아 똑딱 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전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가끔적 많은 사람들의 동의하에 만들라는 것이다.

지금 다수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자신을 불공정사회의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현실의 불만족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 남들 때문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내 탓이오!’가 없고 ‘남 탓이오!’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없는 면도 있다. 그동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지금의 사회지도층 인사나 재벌기업이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출발선상에서는 비슷했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른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흔히 지금은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이 아니라고 한다. 가진 자의 기득권이 너무 크고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결국 부는 부대로, 빈곤은 빈곤대로 세습될 수밖에 없다. 한편 상당수 기득권층은 여전히 편법, 비리 등 부당한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정사회를 주장해도 소용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고지에 올라선 사람들이 이제 와서 공정을 외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공정사회로 가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 법과 원칙을 지키고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득권을 상당부분 포기하고 이를 다수의 덜 가진 사람들에게 돌려주기도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상당기간 지속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일반국민들을 향해 공정사회 건설에 동참하자고 설득한다면 보다 높은 이해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공정사회가 옳다고 해서 지금 당장 모두가 함께 시작하자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뜻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세종시 문제에서 충분히 보았지 않았는가. 정책당국자가 비슷한 오류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서 몇 자 적어 보았다. 내리 경제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회장

yilee2020@hanmail.net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제7회 행정고시에 합격, 재무부 증권국장, 재정경제원 예산실장, 교육부 차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하고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후 2009년 세계미래포럼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저·역서로는 「시민을 위한 경제이야기」, 「미래와 세상」, 「미래진단법」 등이 있다.

행복한 중소기업이란, 회사는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들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정열을 바치는 곳. 『나라경제』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행복한 중소기업'을 소개한다.

# 오직 기술력으로 말한다!

(주)픽스

**물**이 새지 않는 완벽한 배수관에서부터 교량과 터널을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에코플레이트까지. (주)픽스의 경쟁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이다. 배수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코팅기술은 물론 누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 PF파형강관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했다.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두 곳밖에 없다. 미국 오라이언(ISO인증 전문업체)에서 ISO 9002를 획득한 것은 물론 기술표준원에서도 우수품질과 신기술을 인증받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나다의 파형강판 업체인 암텍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도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대한주택공사 등 주로 공기기업의 공사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는 직원들의 도움이 컸다. 그래서 픽스는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으로 보답하고 있다. 초중고 입학 축하금은 물론 대학생 자녀들에게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차별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는 기본이다. 3, 7, 10년차 직원들이 주요 대상이다. 또한 우수사원에게는 매년 부부 해외여행 티켓을 준다. 여기에 연말성과금은 물론 팀별로 우수사원에게 따로 특별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별성과금의 경우 개인은 물론 팀별로도 준다. 직원들이 원하는 문화행사 역시 수시로 지원한다. 회사가 무력무력 자라면서 해마다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고생한 만큼 직원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다. 또 하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회사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참샘동산'에서 매주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직원들에겐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 중 하나다.

픽스는 최근 4년 만에 직원이 4배가량 늘었다. 그만큼 성장세가 가파르다. 올해 매출은 약 300억원, 수출도 400만달러에 이른다. 특히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3배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외에서 주문량이 급격히 늘어 공장도 신축하고 중국 현지에도 계열사를 설립했다. 수출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 바이어의 방문도 많아지고 있다.

인력 채용은 매년 공채로 뽑지만 수시로 채용하기도 한다. 보통 1년에 10여명 정도 선발한다. 서류전형 뒤 면접을 보고 채용되면 3개월간의 수습과정을 거친다. 픽스는 인재를 뽑을 때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무엇보다 동료들과의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창의력은 기본이다. 기술력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창의적 생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나라경제]



# “혹시 ‘앵그리 버드’가 설치돼 있으신가요?”

# APP

**한** 때 농담처럼 번졌던 말이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이다. ‘앵그리 버드’(Angry Bird)를 내려받은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 앵그리 버드를 이미 내려받았다면 진정한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꽤 뼈 있는 농담이었다. 국내 정보 기술(IT) 환경의 한계를 표현한 말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국내 사용자가 앵그리 버드를 내려받기가 쉽지 않았다. 전 세계 2억 명의 사용자의 선택을 받은 인기 게임이었지만, 국내 오픈마켓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관련 법이 갖춰지지 않아서다. 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등급분류를 위해서다.

하지만 오픈마켓의 특성상 사전심의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누구나 자유롭게 게임을 올릴 수 있다는 오픈마켓의 취지와도 맞지 않았다. 결국 애플과 구글은 국내 오픈마켓에 게임 카테고리를 만들지 않았다.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들도 해외 시장에만 주력했다. 결국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해외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야만 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 얼리 어답터 소리를 들으려면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했던 게 우리의 현실이다.

관련업계와 사용자들의 오랜 숙원이 곧 풀릴 전망이다. 오픈마켓 게임물의 사전심의를 철폐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 3년 만이



앵그리 버드는 알을 도둑맞은 성난 새들이 알을 훔쳐간 돼지들을 향해 돌진, 격파한다는 단순한 내용의 게임이다. 간단한 조작, 흥미로움 등으로 누적 다운로드 2천만회 이상을 기록하며 전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중이다.

다.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5일 공포됐고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하고 모든 게임은 자유롭게 오픈마켓에 등록될 수 있게 됐다. 애플과 구글의 선택이 남았지만 국내 오픈마켓에 게임 카테고리가 등장하는 것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장 앵그리 버드의 개발사인 로비오는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로비오는 지난 5월 T스토어에 앵그리 버드의 무료 버전을 내놨다. 애플 앱스토어에 게임 카테고리만 열린다면 로비오가 아이폰용 앵그리 버드를 내놓는 것도 시간 문제다. 게임로프트, 일렉트로닉아트(EA)와 같은 유력 게임사들도 국내 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 이들 개발사는 현재 총싸움게임, 스포츠게임 등 기존 온라인게임에 버금가는 게임을 서비스 중이다.

국내 게임업체들의 모바일게임도 속속 국내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미국 애플 앱스토어 유료게임 전체 순위에서 앵그리 버드의 아성을 무너뜨린 게임빌의 ‘어어퐁’, 지난해 애플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컴투스사의 ‘훈련배틀3D’ 등이 주요 기대작이다. 컴투스가 5월에 출시한 ‘퀸스크라운’, ‘이노티아3’, ‘서드 블레이드’의 경우 일본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국내 스마트폰 게임시장은 족쇄에 묶였던 지금까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해왔다. 족쇄가 풀리면서 이제 ‘고수’들이 등장할 차례다. 고수들의 등장으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는 승객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정현수**  
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부 기자  
gustn99@mt.co.kr

# “녹색성장전략이 사회발전의 길”

정부·OECD 주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6월** 20~21일 이틀간 녹색 성장 개념을 더욱 정교화하고 세계 각국의 실정에 맞는 녹색성장 정책 패러다임의 설정과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정부는 OECD와 공동으로 OECD 창립 50주년과 한국의 OECD 가입 15주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설립 1주년을 기념해 ‘지구 책임적 문명 건설’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을 개최했다. 양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과 세계 각국의 고위 공무원, 니콜라스 스텐 런던 정경대 교수 등 석학을 비롯해 세계적인 녹색기업가 스탕룽 썬텍 회장 등 발표자와 토론자를 합쳐 9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서밋은 글로벌 차원의 녹색성장 협의체, ‘녹색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였다.

회의 첫째 날 이명박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은 바로 기술에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GGGI와 국내의 우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녹색기술센터(Green Technology Center)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녹색기술상’을 제정해 녹색기술 개발·확산에 기여한 과학기술인, 연구소, 기업과 단체에 수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정보혁명이 인류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 아래, 대지진 이후 일본의 회복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신재생에너지위원회 설립을 통해



지난 6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양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일본 에너지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한 경험을 소개했다.

둘째 날에는 ‘한국과 OECD의 새로운 파트너십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양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한국은 처음으로 OECD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라며 “앞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녹색성장전략을 펼쳐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서중해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체제 수립을 위한 선결과제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들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국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소득의 재분배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사회적 화합을 이뤄야 함을 강조했다. 나리경제

신지원 나라경제 인턴기자

## 헨리 퓨슬리(Henry Fuseli)의 악몽

**침**혹 같은 어둠이 음산한 커튼을 드리운 한밤의 침실. 깊은 잠에 빠진 한 젊은 여인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다. 얼마나 몸을 뒤척였는지 여인의 머리와 상체는 거의 침대 밑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얼굴은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처럼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일그러져 있다. 악몽을 꾸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묘한



일이다. 여인의 배 위에 한 괴이한 존재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 말이다. 대체 이 괴물의 존재는 뭘까? 통방울의 험상궂은 눈에 뱀파이어처럼 끝이 뾰족한 귀를 한 이 유인원처럼 생긴 괴물은 다름 아닌 ‘몽마’ (夢魔)다. 늦은 밤 꿈속에 나타나 여인에게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킨 후 그 틈을 타서 여체를 범하고 달아난다는 음흉한 마귀다. 여인이 단말마의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분나쁜 존재의 소행 탓인 것이다. 배경에 드리운 커튼 왼쪽에는 몽마가 타고 온 눈먼 말이 이 음산한 무의식 속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그림은 스위스 출신의 영국작가인 헨리 퓨슬리(1741~1825)가 그린 ‘악몽’이라는 제목의 유화다. 화가는 왜 하필 이런 괴기스러운 그림을 그렸던 것일까. 먼저 그의 개인사를 한번 들춰보자. 퓨슬리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초상화가의 열여덟 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캐롤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대학에서 후일 관상학자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 라바티와 관포지교를 나누게 되는데 사실

그와의 친교는 퓨슬리를 두고두고 쫓아다닐 뜻하지 않은 악몽의 시작이었다. 1761년 그는 라바티의 부탁으로 한 치안판사의 비리를 폭로하는 일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치안판사가 집안 식구를 총동원해 복수에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퓨슬리는 불가피하게 고향과 작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퓨슬리는 이 부당한 복수의 칼날을 피해 스위스 국경을 넘어 4년 동안 독일 각지를 전전하게 된다. 싸구려 여인숙에서 잠을 청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등에 비수가 꽂히는 악몽에 몸서리쳤다. 결국 그는 1765년 도버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들어가게 됐고, 다행히도 그 새 은둔지에서 그림 솜씨를 인정받아 그 후 이주 영국에 눌러앉는다. 신변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그는 그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린 듯하다. 1781년 이후 ‘악몽’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네 점이나 남긴 것만 봐도 그가 받은 젊은 날의 충격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악몽’이라는 작품을 남기게 된 직접적인 계기



1 헨리 퓨슬리, 악몽, 1781년, 캔버스에 유채, 101×127cm, 디트로이트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  
 2 헨리 퓨슬리, 세 마녀, 1783년, 캔버스에 유채, 628×769cm, 개인 소장  
 3 헨리 퓨슬리, 목동의 꿈, 1793년, 캔버스에 유채, 154.5×215.5cm, 런던 테이트 갤러리

는 실연의 아픔 때문이었다. 노총각이었던 퓨슬리는 안나 란돌트라는 여성을 열렬히 사랑했지만 그녀 집안의 완강한 반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 여성에 대한 그의 집착은 대단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1781년 처음 그린 '악몽'의 뒷면에 란돌트로 추정되는 젊은 여인의 초상화를 그린 데서 이는 잘 드러난다. 이때의 실연은 그에게 있어 또 하나의 악몽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 작품을 그림으로써 자신을 버린 여인에게 복수하는 동시에 마음속에 응어리진 자신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려 했던 것이다.

악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까. 퓨슬리는 답답한 현실에 등을 돌리고 한결같이 무의식, 초현실의 세계 속으로 빠져든다. 그가 평생 초상화를 단 두 점밖에 그리지 않은 것은 그의 두터운 현실기피증을 말해준다. 그는 그러한 소재들을 셰익스피어나 밀턴의 작품과 같은 문학 작품 속의 초현실적인 에피소드 속에서 구했다. '세 마녀'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에서 그 소재를 구한 것으로 주인공 맥베스의 왕위 등극과 몰락을 예언한 마녀들의 괴이한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꿈꾸는 목동'은 밀턴의 「실락원」에 등장하는 장면 중 잠에 푹아떨어진 목동에게 숲 속의 꼬마 요정들이 나타나 그의 주위에서 원무를 추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물결치듯 옷자락을 펄럭이며 공중을 부유하는 모습이 마치 꿈속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퓨슬리가 이런 그림들에 집착한 배경을 꼭 개인사적 불행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 그가 살던 시대는 17세기에 대

두해 18세기의 시대정신이 된 계몽주의로부터 촉발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은 물론 감정과 상상력의 극대화를 자극했다. 낭만주의는 그에 대한 예술적 화답이었다. 낭만주의자들은 특히 꿈과 같은 무의식의 영역과 초자연적 세계에 주목했다. 퓨슬리의 인간 내면에 대한 공포의 형상화 작업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시각화한 선구적 업적으로 평가된다. 그의 인간 내면에 대한 탐구와 낭만정신은 윌리엄 블레이크, 존 콘스터블 같은 후배 화가들에 의해 계승돼 19세기 전반기 영국 낭만주의 미술이라는 빛나는 예술 전통을 수립하는 밑거름이 된다. 또한 이는 서구 현대미술의 출발점이 된 인상주의와 상징주의 미술 탄생의 기폭제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영국 미술은 처음으로 서양미술사에 당당히 명함을 내밀게 된다. 스위스에서 도망온 퓨슬리의 '악몽'의 행적이 영국 민에게는 되레 축복이 됐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퓨슬리의 '악몽'은 결코 악몽이 아니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인간 내면에 잠재된 무의식의 세계를 성공적으로 파헤쳤다는 찬사를 받게 되고, 그 명성이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까지 널리 알려졌으니 말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정석범**

미술사학자  
 sukbum@naver.com  
 프랑스 파리1대학 미술사학 박사, 현재 홍익대 대학원 출강.  
 저서로는 「어느 미술사가의 낭만적인 유럽문화기행」, 「아버지의 정원」 등이 있다.

# 바다 바람과 동행하며 걸는 길





# 二 妓 臺



1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아 자갈밭의 해안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2 이기대 공원 해안산책로는 다양한 코스로 지루함을 덜한다. 3 이기대 공원의 남쪽 끝에는 밀물과 썰물에 따라 섬이 5개로 보이기도, 6개로 보이기도 하는 오륙도가 있다. 4 야간 산책의 또 다른 명물인 광안대교가 바다 너머 웅장한 장관을 보여준다. 5 구름다리 위를 지나면 빼적거리며 흔들리는 것이 스릴 만점이다.



“부 산에 가거든 이기대를 꼭 한번 걸어보세요.” 지난해 부산에 사는 블로거 한 분이 내게 건넨 말이다. 이기대라! 이름부터 참으로 묘하다.

이기대(二妓臺)는 부산의 용호동 장자산과 접해 있는 바닷가를 일컫는데, 약 2km 정도의 해안이 기묘한 바위로 이뤄져 있다. 이기대라는 지명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수영성을 점령하고 축하잔치를 벌였는데, 의로운 기생이 술에 취한 왜장을 안고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는 데서 왔다는 게 가장 유력하다. 해서 이곳을 의기대(義妓臺)라 부르다가 후대에 이기대(二妓臺)가 되었다는 것이다. 옛날에 두 기생의 무덤이 이곳에 있어서 이기대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다.

이 경치 좋은 곳에 근래(2005년 조성) 해안산책로가 하나 생겼다. 이기대 해안산책로는 동생말~어울마당~농바위~오륙도 해맞이공원으로 이어지는 3.95km 구간으로, 넘실대는 파도 속에 부서지는 하얀 물보라를 바로 발밑에서 느낄 수 있는 구름다리 5개소와 약 1.5km에 이르는 데크로드(Deck Road), 깎아지른 듯한 바윗길, 숲과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흙길로 이뤄져 있다.

가는 내내 푸른 바다와 기묘한 바위를 보며 걷는 길. 가는 내내 짝조름한 해풍의 맛을 느끼고 찰싹거리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걷는 길. 이기대 해안산책로를 걷다 보면 손에 잡힐 듯 광안대교가 보이고 동백섬이 눈 속에 출렁이며, 해운대의 멋진 광경이 영화처럼 펼쳐진다. 봄에는 순환도로변의 화사한 벚꽃을 만날 수 있고, 여름에는 멕시코 해바라기라 불리는 루드베키아가 활짝 피어난 꽃길을 만날 수 있다.





최근 부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가 있다면, 이기대일 것이다. 바로 영화 ‘해운대’ 때문이다. 1천만 관객이 보았다는 ‘해운대’에 이기대가 등장하면서 이곳은 명실공히 전국적인 명소로 발돋움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이기대에서 오륙도로 이어진 산책로가 부산의 문화예술인들로부터 ‘걷고 싶은 길 베스트 5’에 선정되기도 했다.

본래 이기대 해안산책로는 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1993년에야 일반에 개방됐으며, 1997년 공원지역으로 지정됐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참호로 사용하는 구멍이가 남아 있다.

이 밖에도 부산에는 천혜의 관광지인 태종대 감지해변을 따라 난 약 3km의 감지해변 산책로, 해운대 해변을 따라 걷는 동백공원 해안산책로, 두송반도 해안산책로, 달맞이고개로 알려진 문탠도로,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사이 해안가를 끼고 있는 미포·청사포·구덕포 마을로 이어진 삼포해안길, 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을 연결하는 길이 800m의 송도해안산책로, 도심 인근에 위치해 천혜의 해안절경과 함께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암남공원 해안산책로, 기암절벽과 바다의 낭만이 수려한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전망대, 낚시터, 건강의 길, 쉼터, 해녀촌 등 여러 부대시설까지 마련된 절영 해안산책로, 부산 최대의 섬 가덕도에 조성된 천가동 해안산책로 등이 있다. 나라경제

글 이용한 작가 / 사진 이상현 작가

길 위의 시인 으로 지난 13년간 국내외 오지 혹은 섬을 떠돌며 글을 써왔다. 1996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수상했다. 시집 「안녕, 후두둑 씨, 「정신은 아 프다, 여행에세이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길 티베트 차마고도를 따라가다, 「바람의 여행자: 길 위에서 받아 적은 몽골」 등을 펴냈다.



남상우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 G20 서울 개발컨센서스를 계승·발전시키려면

**한** 국은 OECD에 가입한 지 14년 만인 2009년 말 OECD 개발협력위원회(DAC) 회원국이 됐다. DAC 회원국 중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유일한 국가가 된 것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해외원조의 혜택을 많이 누렸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경제와 ‘다함께 하는 성장’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때가 됐다.

한편 한국은 G20의 일원으로서 지난해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특히 서울 개발컨센서스를 채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서울 개발컨센서스는 무엇보다도 국가 간 개발격차를 줄이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저소득 국가의 성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아울러 성장 장애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춘 행동계획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 핵심 분야는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무역, 민간투자 및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성장복원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재원 조달, 개발지식 공유 등 9개다.

DAC 회원국으로서 공적원조를 크게 늘려야 하고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발의제 채택에 큰 역할을 한 한국으로서 개발협력의 역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위 9개 분야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중 우리의 비교우위는 ‘개발지식 공유’가 아닐까 한다. 어느 나라인들 함께 나눌 귀한 개발경험이 없을까마는 개도국들이 한국에 절실히 바라는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던 최빈국에서 반세기 만에 선진공업국 대열에 들어선 개발지식과 경험이라고 하겠다. 다른 협력 분야에 비해 돈을 덜 쓰고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발경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우리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면 된다는 생각은 큰 착오다. 어떤 정책의 성패는 당시의 대외여건과 국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상황과 초기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도국들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의 발전경험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당시 여건과 정책의 무엇이 성패의 결정적 요인이었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의 성패요인은 고사하고 그것이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둘째, 개발경험을 축적하고 있

는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이나 유엔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개발지식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우리의 경험만으로 어떤 정책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 경험을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경험에 비추봄으로써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셋째, 개발경험을 제대로 나누기 위해선 주요 개발협력 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 없이 우리 경험을 전수한다는 것은 마치 환자의 상태를 검진하지 않고 약을 처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노력에는 정부 싱크탱크들, 과거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던 관리들, 일반 학자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개발연대에 경제정책의 산실 역할을 담당했던 KDI와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앞장서야 한다. **김재**

**어느 나라인들 함께 나눌 귀한 개발경험이 없을까마는 개도국들이 한국에 절실히 바라는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던 최빈국에서 반세기 만에 선진공업국 대열에 들어선 개발지식과 경험이라고 하겠다. 다른 협력 분야에 비해 돈을 덜 쓰고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